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신문의 18대 대선후보 보도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윤 형 조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지역신문의 18대 대선후보 보도

지도교수 이 상 기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윤 형 조

윤형조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23일



주 심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위 원 철학박사 김 영 환 (인)

위 원 문학박사 이 상 기 (인)

- 목차 -

1.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필요성	4
3) 연구문제	6
2. 이론적 논의	9
1) 대선 후보 보도의 문제점	9
2) 한국 언론의 선거 보도 문제점	11
3) 지역 언론의 역할	15
4) 해외의 선거 보도	16
3. 연구방법 및 분석	18
1)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	18
2) 후보 보도 분석	19
3) 표집	20
4) 분석	20
4. 연구결과	22
1)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	22
2) 지역 관련 보도	31
3) 후보 보도	38
4) 대선후보 선거 보도에 따른 문제점	56
5. 요약 및 결론	60
참고문헌	64
부록	68

A Study of the 18th Presidential Candidates Reporting on the Local
Newspapers

Yun Hyung-jo

Department of Mass-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analysis of the 18th presidential candidates reporting on the local newspapers. It turns out that local newspapers are difficult to find differences about the subjects on the reporting. Because newspapers have standardized news format about the elec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presidential elections, the horse-racing report ratio is decreased.

But some local newspapers were biased, especially, *Busan-ilbo* and *Maeil-shinmun* have bias toward the region-based candidates. This problem causes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reporting. Newspapers should be fair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Kangwon-ilbo* has a lot of concern for the local issues. But it showed regional self-centeredness.

Include the front pages and the editorial pages, all pages needed to be analyzed for presidential election report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reporting on the local newspapers should be considered fairness and locality.

지역 신문의 18대 대선후보 보도

윤 형 조

1. 서론

1) 문제제기

선거 때마다 그러하긴 했지만, 제 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다양한 사건 속에서 막을 내렸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부터, 이정희 후보의 사퇴까지 대통령 선거가 마치 하나의 게임처럼 진행됐다.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지명했다. 이는 역대 대선과는 다르게 무소속 후보가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후보자가 대선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역대 대통령 선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선거가 시작했다고 보는 8월 말경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그리고 정수장학회와 관련된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루다가 민주당 경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등장하고 이후 유력 후보로 점쳐지던 안철수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또한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공약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서로 비슷한 공약, 일명 퍼주기 공약과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며 서로 다른 당 사이에서 차이점을 모색하기 힘들었고,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예컨대 부산일보의 2012년 10월 30일 기사 <신공항·해수부 부활 등 지역현안 정책대결실종> 기사에서는 “이번 18대 대선전은 정책선거가 실종 됐다는 평가 속에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대결과 지역현안보다는 대선 자체가 후보자에게 집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정당보다는 후보 자체에 대해 관심도가 쏠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 개개인을 뽑는 것과 함께 정당이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수렴과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는 표를 인식한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하면서 후보자간 정책 대결이란 것이 무색해졌다. 또한 상대 후보자에 대한 견제와 보다 좋은 공약처럼 보이기 위한 과정이 서로 비슷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이어졌다.

본디 정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공약이 기본적인 선택 사안이 되어야 한다. 선거 공약은 국민과 미리 하는 약속으로 이는 대통령의 과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약의 내용에 따라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 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선거라고 할 수 있다(안철현, 2004).

정책과 공약에 대한 확인 후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선거 행태는 출신지역에 따라 투표 경향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5대~17대 대선의 수도권거주 영호남 출신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영호남 출신의 거주비율과 후보 득표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남 출신 유권자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 2009).

단순히 지역 출신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정책과 공약이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지역 언론이 함께 힘써야 할 사안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 언론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15대 대선의 경우 광주·전남 지역 언론은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전체적인 기조가 김대중 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는 균형 보도를 하려고 노력 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동욱, 1998).

부산지역의 15대 대선 보도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특수 사례이긴 하지만 국제 신문의 경우 후보 등록이후 선거일까지 대선 관련 기사가 1면 보도로 등장한 경우는 단 1건 선거당일밖에 없었다. 당시 특수 상황인 IMF로 인해 1면은 금융위기, 경제위기, 국가부도 등의 기사로 채워졌다. 따라서 선거보도는 자연스레 2면~5면으로 이어졌으며, 선거에서는 IMF 관련 기사로 인해 선거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가능 할 것이다(채백, 1998).

17대 대선 보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6개의 지역 신문(부산일보, 대구매일, 광주일보, 전북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의 판세 보도 비중이 전체

기사의 43.3%로 나타났으며, 정책 공약 보도가 평균 8.4%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경마식 보도의 문제를 답습한 것으로 해석된다(최영재, 2013).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마식 보도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 구분 없이 선거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양승찬, 2004, 권혁남, 1996, 안차수, 2006).

이런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대선 보도에 있어서 정책검증이나 공약에 대한 확인보다는 인물 자체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다. 인물에 대한 관심의 집중은 정책과 공약을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연고와 정치성향을 따져 투표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치성향에 따른 투표는 하나의 투표방법이 될 수 있으나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에는 직접적인 공약이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언론은 이와 같은 정책 검증과 공약을 시민들에게 또는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정책 검증과 공약을 하기에 앞서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편향적인 의견과 견해를 통한 정책 검증이나 공약은 특정후보에 대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KBS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발표한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주간보고서」 제 33호에 따르면, KBS는 스스로 대선 보도 곳곳에서 불공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형식적 차원에서는 기계적 균형만 유지했다는 평가와, 내용적 차원의 공정성과 보도 프레임 구성의 공정성 그리고 영상요소의 공정성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언론노동조합 노보, 2013). KBS에서 스스로 평가하기 이전에도, 우리 언론은 선거기간동안 공정성과 균형성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비단 KBS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 그리고 신문 보도 측면 또한 다르지 않았다. 신문 또한 보도 측면에서 형식적 균형보도를 보여주는 듯 하였지만, 이면에 숨겨진 교묘한 편파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 왔다(최영재, 2007, 이효성, 2012).

앞선 사례에서 언급 했듯 우리 언론은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편파적 보도, 흥미 위주의 경마식 보도, 공정성의 문제를 답습해온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과는 다르게 해당 지역 출신의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 보도 유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지역 신문은 생존의 기반을 지역과 함께 하기 때문에 중앙 신문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과는 다르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선 보도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지역 신문의 특성상 지역기반에서 비롯할 수 있는 편파적 보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따져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하나의 기능으로서의 언론의 역할과 또 지역을 잘 대변하고 있는 지역성에 관련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 보도에 있어서 경마식 보도에 대한 비판은 자주 등장하는 사례 중 하나였다. 경마식 보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이나 후보 검증에 대한 보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경마식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켜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나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이나, 능력, 자질비교에 관한 정보 전달을 소홀하게 만든다(권혁남, 1996). 경마식 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경마식 보도 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5대 총선 연구를 분석한 권혁남(1996)의 연구에서는 TV선거보도의 약 85%가 경마식 보도가 관련되어 있었으며, 14대 총선과 19대 총선을 비교한 노동렬(2012)의 연구에서도 경마식 보도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17대 대선 보도 또한 경마식 보도비율이 43.3%로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최영재, 2013). 이번 대선 또한 이전과 같은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역 신문만이 가지는 지역에 대한 보도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역 언론은 지역에 대한 봉사와 함께 여론을 반영해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발전시켜야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언론도 선거철이나 대형사업 관련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한다는 평가를 받아오기도 했다(이한웅·엄기열, 2010).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기인하는 것도 지역의 이익에 민감하고 지역주민과의 밀착도가 중앙지와는 다른데서 오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더라도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어진 지역 공간 내에서 주민 참여와 화합을 이뤄내는 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박홍수, 1986).

이와 관련한 상황 속에서 지역 신문, 특히 대통령 후보자의 연고지인 지역 신문의 보도 경향은 연구 쟁점을 만들어 낸다. 우선, 공정성 문제와 지역성 문제의 마찰이 있을 것이다. 중앙 신문과 마찬가지로 지역 신문 또한 공정 보도와 불편부당 지향을 언론 규범의 한 축으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규범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주의의 표방이다(강상현, 1993).

이와 같이 지역 언론은 두 가지의 규범 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선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언론은 독자와 그 생명력을 붙여 넣는 주체가 지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지역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성의 문제를 항상 숙고해야 한다. 지역성과 공정성의 개념은 대립할 수도 혹은 상생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정책과 공약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원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일반적 인식과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역 언론은 지역에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혹은 지역이 유리해 질 수 있도록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성의 개념을 지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기사를 보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충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공정성의 개념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배경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특유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와 투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3, 14, 15대 대선에서의 지역 투표 경향은 변화가 없다가 16대 대선에서 지역투표 경향이 상승하였다가 17대 대선에서 약화되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영남의 지역기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17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호남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김진하, 2010). 하지만 다시 이번 18대 대선의 결과를 살펴보면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득표한 비율은 최소 86%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지역주의 투표 성향에 대한 강화로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론은 지역주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며, 후보자에 대한 선거 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을 띄어야 한다. 특히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은 규범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국내 언론법상 특정 후보자가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신문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 금지된다.¹⁾ 미국

1)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 일부 지역과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사설면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실정과 국내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유리하게 보도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지역으로 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있어왔다. 이번 대선도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80% 이상 득표를 하였으며, 반대로 전북, 광주, 전남에서는 최소 86% 이상을 문재인 후보가 득표했다. 이와 같은 현상만 보더라도 지역 간 정파성은 단순 수치 비교 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 언론은 지역민을 대변하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인가 또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지역 언론은 생존 기반이 지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따른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 신문은 언론이다. 지역 신문은 지역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언론임과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향해야 할 사명감도 함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지역 신문은 대선 보도에 있어서 지역을 연고로 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파성의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보도 행태를 띄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연구문제

우리나라 언론은 15대 대선 이후로 선거철이 있을 때마다 호남과 영남지역으로 나뉘는 투표성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지역주의 보도 및 투표 성향으로 인해 호남과 영남이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기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5.8.4>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하였다. 17대 대선 당시에는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이전 대선에 비해 약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진하, 2010)²⁾. 하지만 15대~17대 대선의 수도권 거주 영호남 출신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영호남 출신의 거주비율과 후보 득표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대, 2009).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같은 투표 행태 속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언론이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 보도를 생산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선거 보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과거 우리 언론은 정치인이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역감정 조장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 이를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언론은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유발하여 지역연고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구도를 고착화 하는데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조철래, 2009).

지역연고 후보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 보도가 아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지역 언론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불리하게 보도하고 있는지 혹은 유리하게 보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후보자가 해당 연고지역의 경우 보도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후보자에 대한 보도 태도를 살펴보면, 경마식 보도에 대한 문제점도 답습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경마식 보도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대선을 비롯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거져 나왔다. 특히 지역 신문의 17대 대선 보도 관련 연구에서도 경마식 보도에 대한 비율이 높았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이 이전 대선과 다른 점은 우선 父-子(女)로 이어지는 대선 후보의 등장과 강력한 야권 무소속 후보의 등장, 그리고 야권 단일화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첫 여성대통령이 등장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것보다는 인물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사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

대선이 끝난 직후 뉴시스 2012년 12월 20일 보도 <[되돌아본 18대대선 ①] 전문가들 "정책이슈 완전 실종...밋밋한 선거">에서는 “제18대 대통령

2) “한국 지역주의 변화를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투표 경향의 변화와 정당의 지역의존성 변화를 통해서 알아봤다. 13, 14, 15대 대선에서 전체적인 지역주의 투표 경향은 변화가 없었고, 16대에 다시 강화되었다가, 17대 대선에서 약화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 충청의 지역투표 경향이 제일 약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투표 경향도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정당의 경우에는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지역의존성이 제일 높았으며, 영남에 기반을 둔 정당의 지역의존성이 낮아지고 있다”(김진하, 2010, p.89)

선거는 보수·진보 진영이 총결집해 맞대결을 펼친 선거였다. 그러나 정책 이슈는 실종돼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은 정책에 논의와 대결은 사라지고 인물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다"며 "후보 간에 정책적 차별점도 찾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 정책을 통한 후보자 선택은 기본적인 사안이다. 특히 지역 언론은 지역에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물에 대한 점만을 강조 한다면, 정책 공약과 검증의 역할을 지역 언론이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인물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보도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덧붙여 특정 후보에 유,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언론의 지역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언론의 공정성 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지역에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셋째, 신문사별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넷째, 대선 후보 선거 보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논의

1) 대선 후보 보도의 문제점

대선 시기가 되면 정당을 위주로 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관심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리고 정당과 정책에 대한 보도보다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인가?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대립하는 후보자들이 정책이나 이념에 관련하여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 도덕성, 매력 등의 ‘인물’에 관련된 요소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했다. 국내의 경우 대선직선제 개헌, 문민정부 출범 등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며 이념에 대한 대결 구도가 희석되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자의 개인 이미지가 부각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허만섭, 2008).

이와 같이 이념에 대한 대립 구도가 사라지고, 정당 간 정책의 차이가 많지 않을 경우 후보자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세를 우려하는 기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2012년 12월 3일 경인일보 13면 <쫓추는 네거티브, 정책대결 실종하나>의 보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박근혜·문재인 양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하다.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의 소리도 높다. 지난달 30일만 해도 양 쪽은 모두 18번씩 상대를 비방하는 브리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에 대한 허위 거래 의혹 신고를 집중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박 후보가 3년간 133벌의 여성 정장을 입었고 그 옷값만 2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 홈페이지에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사만평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만평은 박 전 대통령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고 총 든 김재규와 두 명의 여성이 있는 그림이다. 모두 검증이라는 미명아래 쏟아내는 더러운 네거티브다.” 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각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방과, 공세로 인해 관심이 후보자 개인에 쏠리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후보검증에 대한 보도이다. 17대 대선 당시, 한국 언론의 검증 보도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대부분의 보도는 후보 진영 간 공방을 단순히 중계하는데 그쳤으며 후보자간의 검증을 언론사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 진영에서 제기한 의혹, 비리를 언론이 전달해 주는 방식이 많았다. 문제점은 검증과정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리, 부동산 비리, 재산 및 군대 관련 비리만을 밝히려는데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가 아직 사회 전반에 남아있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는 것이다(김종철외, 2007).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보니 선거가 다가오면, 언론은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과거를 확인하고, 재산 관련 비리, 자식의 위장전입 비리, 군 관련 비리, 특혜 논란 등을 보도한다.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의 사생활 범위를 제외하고, 비리 관련, 위장전입, 군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정치 후보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불충분한 정보와 시민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선거웹사이트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출현했다.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은 ‘데모크라시넷’의 경우 후보자와 주민들이 중요사안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었으며 입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 및 이슈별로 후보자의 정견을 시시각각 소개하였다(장원석, 2001).

우리 언론이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과거를 캐내고 비리를 캐내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2) 한국 언론의 선거 보도 문제점

① 편파 보도

편파 보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빠질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언론이 편향(bias) 보도를 하면서 시비의 발단이 된다(최영재, 2004). 언론을 이루는 구성원이 사람인 이상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나의 기사를 쓰더라도 각자의 주관과 시점에 맞게 내용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도 측면에서 행해지는 편파 보도는 보도량의 차이, 왜곡된 보도, 여당 후보의 이슈나 정책은 크게 부각시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이슈나 정책은 아예 묵살하거나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 불공정한 뉴스 밸류 선정 등이다(권혁남, 1999). 공정한 언론이라면 선거에 있어서 개입의 역할보다는 매개자의 역할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일부 언론은 겉으로 불편부당을 택하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선거에 있어서 언론 본연의 역할은 후보를 검증하는 일이지 대통령을 당선시키려는 선거 개입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일부 언론은 후보의 정책 검증과 자질 평가보다는 유착관계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 그 경쟁 후보에겐 불리한 편파 보도를 통해 선거개입적 보도관행을 적지 않게 보여 왔다(이효성, 2002).

▷ 언론 중재위원회에서는 편파 보도와 관련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제 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³⁾.

② 경마식 보도

선거를 치를 때 언론이 자주 비판받는 것이 있다. 경마식 보도는 그 중 하나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은 후보의 정책 검증, 비판이 없이 단순 수치상 그래프나 지지율의 변동만을 보도하며 마치 경마에서 어떤 말이 앞서 달리는가에 초점을 둔다는데 있다. 양승찬(2004, p.48)에 따르면 “분명 누가 앞서고 있고, 당선 가능성이 있으며 후보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민주주의 선거과정 중 유권자가 궁금해 할 수 있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선거에 담긴 게임의 속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선거에 담긴 게임의 속성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 보도에서 경마식 보도의 비중이 높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어떤 요인에 의해, 혹은 어떤 정책에 의해 판세가 나뉘는 것보다 단순 후보가 이기고 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대결이나 정책 검증에 대한 보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이다.

미국의 언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임스 리서(1996, p.239)에 따르면 “선거유세를 취재하는 데 있어 뉴스매체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이른바 ‘경마 언론’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다. 즉 인기도 조사나 어느 후보가 얼마나 앞서 가느냐 등 마치 경마를 취재하는 보도에 임한다는 것이다. 약간의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때로는 도움도 되겠지만, 여론조사에 과다 의존함으로써 선거유세에 있어 더욱 본질적인 이슈를 놓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③ 이슈 보도에 인색

우리나라 언론은 후보의 선거유세나 득표를 위한 활동을 주로 보도한다. 후보들의 정책이 어떻게 다르며 실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후보자들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권혁남, 2006). 즉,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검증의 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일명 따옴표(“”)저널리즘이라 불리는 객관주의 보도 성향에서도 나온다.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이에 관련한 정책이나 검증은 이후로 미뤄버리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행위 중 이상적인 것은 후보자간 혹은 정당 간 정책

3) 언론중재위원회(2012), 2012년 제 18대 대선선거기사심의편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p.25.

대결이나 제기된 이슈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 방법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기된 이슈의 문제 형성의 원인부터 해결 방안까지 심도있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적 심층 보도 능력과 TV 보도의 한정된 시간 등을 이유로 단순한 사건 보도 차원에서 보도가 머무른다(황근, 2001).

이는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전문적인 보도, 해결책 강구 등의 심도있는 분석 보다는, 단순히 후보자에게 지역 관련 현안의 정책에 대해 촉구하는 기사나 혹은 지역 관련 정책의 실종에 대해서만 보도 할 뿐, 현안에 제시된 정책의 검증이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사를 찾기란 힘들다.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뉴스의 내용이 어렵고, 분석에 대한 내용이 까다로울지라도 보다 나은 정책공약과 대결을 위해 깊이 있는 분석과 이에 대한 보도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내딛는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십성 위주의 선거 보도

가십성 위주의 선거 보도는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면 보다는 흥미를 위해 부정적 보도로 호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증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순 흥미위주의 보도로 선거자체의 본질을 흐트리려 놓거나 혹은 후보자에 대한 면 보다는 후보자 주변 사람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과거 들추기를 통한 후보자 깎아내리기에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정춘(1992)에 따르면 “언론으로서는 이러한 보도행태가 자사의 독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 사회전반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을 결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 각국에서 가십란이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안고 있는 이러한 가십란의 폐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⑤ 지역주의 보도 경향

선거 보도에서 정보에 대한 진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보가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선거 보도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잃게 된다. 선거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다수의 유

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이 말하는 것을 직접 접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정보를 전달 받는다.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우는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역주의 보도는 공평하게 모든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 혹은 특정후보에 대해 유리한, 혹은 불리한 점을 강조하며 특정 정보에 대해서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특정 후보나 정당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면 해당 후보자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다른 정당후보나 군소 정당의 후보는 소홀히 다루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구교태, 2008).

조철래(2009, p.5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다. 특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분명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나는 투표행태 및 일체감이 나타나고 있다. 두 지역 간의 배타적 투표행태 및 정당 일체감은 국민통합이라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을 해당 연고지를 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의라는 하나의 잣대에 근거해서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흔히 선거 보도에서 지역주의라는 말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일방적인 투표 행태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역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며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그 연대·협력을 촉진하려는 입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선거 보도에 있어서 후보에 대한 지역주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책과 대형 국책 사업에 따른 지역주의 또한 현대사회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국책 사업에 관련된 보도 프레임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조건 우리한테 와야 해’식의 보도 행태는 지역구별 없이 등장한다. 특히 국책 사업 관련 보도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한 예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두지역의 격렬한 대립으로, 두 지역 언론들도 이 주제에 가담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또한 소요 예산 측면에서도 상대 지역이 서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둘째, ‘탈락하면 집단 반발과 후폭풍 거세다’식의 보도는 주로 입지 선정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도 형태이다.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확정되면서 이런 보도 형태를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충청권의 경우 해당 정

책이 매우 합리적인 과정으로 진행 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이 탈락된 지역의 언론은 비판적인 멘트와 함께 불공정성을 부각했다. 셋째는 ‘사이좋게 나눠먹기 프레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지역이 국책사업에서 무시당했다는 식의 차별을 받아 왔다는 것을 부각하며 형평성에 대해 보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임영호, 2011).

위의 세 가지 형태는 정책과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역이기주의 보도행태이다. 주로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후보자의 연고지와, 지역감정, 혹은 출신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줬으나, 이와 관련 없이 국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나타난다. 특히 총선과 대선보도에서 정책과 공약이 해당지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와 이에 따른 보도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 지역 언론의 역할

지역 신문도 중앙 신문과 같은 기본적인 언론의 규범을 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적 논의 이외에도 지역 언론은 지역을 위한 역할 규범이 따로 존재한다. 우선 지역 신문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대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지역에 기인한 문제들을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제공한다. 지역 신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앙 신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선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신문은 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심각해져가는 지방 불균형을 위한 대변자로 지역 신문의 역할이 조명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서울에만 치중해 있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지방 분권은 새로운 시대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정책이나 사업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관심을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한다. 지역 신문은 이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역 신문은 중앙 신문에 밀려 발전해오지 못하고 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한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지역사회내의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지역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도 불가능하고 지역사

회의 균형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장호순, 2003).

현재의 지역 언론은 민주적 역할과 사명을 요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만을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와 기능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 언론에 대한 요구와 당위성에 대해서만 살펴볼 뿐 지역 신문의 발전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지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선거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민주적 규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민주적 규범역할을 선거상황에 적용해보면 첫째, 지역 언론은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정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보 및 공약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역민을 위한 공론장 역할을 다하고 넷째, 지역 유권자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최영재 2013). 지역 언론은 규범적 논의 이외에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다.

4) 해외의 선거 보도

전 세계적으로 경마식 보도는 선거 보도에서 등장한다. 분명 후보자의 지지율과 판세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계식 보도가 과도하며, 1~2%의 수치를 강요하는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판 대상이 되어 왔다. 이승철(2007)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도 지지율에 대한 중계식 보도가 여전하다고 한다. “다만 1990년대 경마식 보도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이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5%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오차범위 내 리드’ ‘다소 리드’, 그 외는 ‘통계학적으로 동률’이라는 제목을 쓴다. 1~2%의 차이마저 수치를 앞세워 제목을 다는 우리 언론과 비교된다.”고 말한다.

미국언론의 전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특정 주의 지역 언론의 경마식 보도비율에 대한 연구를 확인해보면 인디애나(Indiana)주의 가장 큰 신문 두 언론사 (*Indianapolis Star*, *Fort Wayne Journal Gazette*)를 대상으로 한 2008년 미 대선보도 연구에서는 *Indianapolis Star*의 경마식 보도 비율은 15%, *Fort Wayne*의 경마식 보도비율은 12%로 확인 할 수 있었다(Maria Platz, 2010).

2008년 미국의 대선 보도 시기와 비슷한 한국 17대 대선에 관련된 지역 언론의 대선 보도연구(최영재, 201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17대 대

선 보도의 경마식 보도 비율이 43.3%인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 인디애나주의 경마식 보도비율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보도의 비율을 감안 하였을 때 국내 언론은 17대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경마식 보도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또 다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미국과 스웨덴의 선거 보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국 선거 보도가 스웨덴 선거 보도에 비해 게임 메타프레임, 경마식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이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스웨덴 언론의 경우 선거 보도에 있어서 이슈 중심적 보도와 해석적 보도를 더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Strömbäck, Jesper, and Daniela V. Dimitrova, 2006).

경마식 선거 보도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독자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계열 연구 결과 캠페인 전략에 대한 뉴스 보도보다 경마식 보도에 대한 수요가 두 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경마식 선거 보도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향상하고 선거과정의 신뢰에 대한 약화를 가속화 한다(Hahn, Kyu, Shanto Iyengar, and Helmut Norpoth, 2002).

바로 이러한 점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흥미 위주의 선거 보도로 이어져, 독자는 기자의 해석과 분석에 따른 양질의 기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점은 대선에서 보다 양질의 정보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하는 것을 저해한다.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 보도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형식적 공정성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공정성의 항목은 보도 대상 빈도, 시간, 숫 크기였으며 이는 후보자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보도 순서에서는 미국이 더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용상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 성향은 한국이 더 공정하다는 결론을 확인 할 수 있었다(남지나, 2010).

3. 연구방법 및 분석

신문 대상은 ABC협회의 부수를 중심으로, 각 도별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지역 신문을 하나씩 선정하였다. 분석기간은 2012.8.20~2012.12.19 기간의 1면 보도와 사설면을 분석한다. 박근혜 후보가 당내 내부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2012.08.20)부터 실질적으로 대선에 돌입했다고 보았다. 경상도 지역에 특별히 두 개의 신문이 선택된 이유는 18대 대선이 TK(대구경북)지역, PK(부산경남)지역에 의한 투표 갈림 현상과, 주요 후보자의 표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박근혜 후보는 대구에 기반한 득세와 문재인 후보가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1)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

분석에 앞서 보도면과 사설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1면과 사설면의 보도 특성이 다른 점에 기인하였다. 또한 주제에 따른 구분을 실시, 기사 내용에 따라 기사 내에서 2개 이상의 주제가 등장한 경우에는 복수코딩을 실시하였다. 1면과 사설면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 주제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① 정당 중심 보도 : 각 정당의 대표와 같은 인물이 정치 활동을 보도 한 내용이거나, 당권 경쟁, 내분 사태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한다.

② 후보 중심 보도 : 후보의 유세현장, 정치적 갈등,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보도를 의미한다.

③ 정책 중심 보도 : 정책 중심 보도는 외교, 민생, 행정, 사회 분야 등에 대한 선거 정책이나 공약 혹은 민생 경제 행정 분야에 관련한 분야에 주안점을 둔다.

④ 판세 중심 보도 : 판세 중심 보도는 지지도나 인물간의 대결구도에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⑤ 선거 자체 보도 : 선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보도와 그와 관련된 보도

를 주 대상으로 하였다. TV토론 예고, 선거에 대한 정보개진, 공명선거와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사설면을 분석하는 틀은 1면 보도에 관련한 분석 기준에서 판세보도 측면을 제외하였다.

2) 후보 보도 분석

신문사별 후보 보도 횟수에서는 기사에서 후보에 관련된 사안이 보도되었다면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분석은 주제와 상관없이 단순히 후보자가 거론되지만 하더라도 기사 횟수 측정에 포함시켰다. 후보자에 대한 보도 횟수 확인 이외에도 이를 세분화 시켜 후보자에 대한 단독 보도 횟수를 확인하고 한 기사 내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보도한 기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보도한 기사,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보도한 기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를 동시에 보도한 기사, 모든 후보를 동시에 보도한 기사 등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한 조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과 함께 후보자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다시 주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영재 (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를 후보 유세, 판세 보도, 후보 검증 보도, 정책 보도, 일반 정보 보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후보 유세 보도 : 대선기간 동안 후보자의 유세 보도, 유세 현장 보도, 지역 유세 등을 보도한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② 판세 보도 : 판세 보도는 지지도나 인물간의 대결구도에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후보 검증 보도 :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식, 재산, 세금, 병역이행, 후보자 개인에 대한 역량 확인 등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보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④ 정책 보도 : 정책과 공약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으며 공약의 확인, 공

약 검증, 정책 검증, 지역 관련 대선정책 이나 공약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⑤ 일반 정보 보도 : 위의 항목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실 전달 기사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를 포함한다.

3) 표집

총 6개의 신문을 포함하였으며 신문은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이다. 각 도별 신문사는 한국ABC협회의 2011년 신문사별 인증 부수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신문 기사를 분석한 도구는 지면기사 스크랩 프로그램인 “아이서퍼”를 사용하였다. 아이서퍼를 통해 등록된 PDF 지면 제공 파일을 통해 기사를 분석하였다. 전체 지면 중 1면과 사설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6개 신문사 전체 기사(1면/사설면) 수는 653개로 개별 신문사의 기사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분석에 사용한 신문 기사 수

	부산 일보	매일 신문	광주 일보	대전 일보	경인 일보	강원 일보	총 합
1면 기사	64	59	73	101	51	83	431
사설	34	78	9	44	31	26	222
총 합	98	137	82	145	82	109	653

4) 분석

18대 대선 보도와 관련한 기사를 포함시켰으며, 기사 제목이 아닌 내용 분석에 의한 분류를 실시하였다. 언론사별 대선 보도 주제 확인에서는 기사지면(1면/사설), 보도 신문사, 주제별 보도(정당 관련 보도, 후보자 관련 보도, 정책 관련 보도, 판세 보도, 선거 관련 보도)로 나누었다. 세부 항목으로는 1면, 사설면, 후보자에 대한 보도 태도를 포함시켰고, 후보자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기사 내에서 어떤 후보자에 대해 보도하였는지를 확인 하였고, 단독 보도인지, 후보자 2명에 대한 보도인지, 혹은 그 이상의 후보자를 다루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관련 보도를 포함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선거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후보자의 기사 주제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후보 유세 보도, 관세 보도, 정책 보도, 후보 검증 보도, 일반 정보 보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후보에 대한 기사의 태도 분석에서는 ①공정적, 해당 후보에 대한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보도, ②중립적 보도, ③부정적, 해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보도로 나누었다.



4. 연구결과

1)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

<표 2> 신문사별 1면 대선 보도 주제⁴⁾ (괄호 안은 지역 관련 보도 횟수)

	정당	후보	정책	판세	선거	합계
부산	2	33(1)	13(11)	9	9	66(12)
	3.0%	50.0%	19.7%	13.6%	13.6%	100%
매일	2	37(1)	6(3)	6	8	59(4)
	3.4%	62.7%	10.2%	10.2%	13.6%	100%
광주	12	41	7(3)	6	8	74(3)
	16.2%	55.4%	9.5%	8.1%	10.8%	100%
대전	15	60(2)	12(5)	4	13(1)	104(8)
	14.4%	57.7%	11.5%	3.8%	12.5%	100%
경인	5	28(1)	8(6)	5	5(2)	51(9)
	9.8%	54.9%	15.7%	9.8%	9.8%	100%
강원	16(2)	41(1)	5(4)	8(1)	13(5)	83(13)
	19.3%	49.4%	6.0%	9.6%	15.7%	100%
합계	52(2)	240(6)	51(32)	39(1)	56(8)	437(49)
	11.9%	54.9%	11.7%	8.7%	12.8%	100%

교차분석 : $\chi^2=28.433$, 자유도=20, $p=0.100$

부산일보에는 정당 관련 보도 2회, 후보 관련 보도 33회, 정책 관련 보도 13회, 판세 관련 보도 9회, 선거 관련 보도 9회로 나타났다. 정당 관련 보도는 민주당, 새누리당 각각 1번씩으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파행 관련 기사를 다루었고 새누리당 관련 기사는 전당대회 관련 기사로 나타났다.

후보 관련 보도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도 된 것을 알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관련 기사부터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관련 보도 까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단일화 관련 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일화에 대한 보도 비율이 높았다. 정책 관련 보도는 13건(19.7%) 차지하였다.

4) ※ 기사내의 주제 선별에 따라 복수코딩

이 중 11건이 지역 관련 보도로 지역에 관련된 기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판세 관련 보도는 9건(13.6%)로 나타났다. 선거 관련 보도, 단순 정보 전달 보도는 9건(13.6%)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의 지역 관련 보도는 총 12건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관련 정책 12건 중 해양수산부 부활 관련 6회, 신공항 관련 기사 6회로 나타났다. 기사 횟수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해수부 설치 가능성과 신공항 공약에 대한 관심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부산일보 2012년 11월 10일 1면 기사에는 <부활하는 해수부 부산 설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직접적으로 부경대에서 가진 질의응답에서 “해수부 부활을 하면 부산에 두겠다는 애기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것에 해수부를 부산 설치 가능성과 연관 지어 보도 하였다.

또한 가덕도 이전 공약과 관련하여서도 부산일보 2012년 11월 17일 1면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공약하라”>, 부산일보 2012년 11월 27일 1면 <“신공항 문제 막판 최대 변수부상”>, 부산일보 2012년 12월 4일 1면 <‘가덕신공항’ 끝내 미확정…부산,朴 화법에 판정패> 3건의 기사로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사안을 종합해보면 신공항 문제와 해양수산부 부활 관련은 모두 부산 지역에 확정된 공약이 아니었다. 특히 해양 수산부 부활은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부산지역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부산일보는 직접 지역과 관련된 현안인 해양수산부 관련 보도를 하며 부산 지역에 대한 설치에 관한 관심을 표출 한 것이다. 또한 신공항 문제도 가덕도, 김해공항 확장 공사, 밀양 등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신공항에 대한 공약 자체도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부산일보가 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부산일보는 실질적으로 지역 정책과 공약에 대한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관심이 있는 것 알 수 있었다.

매일 신문은 정당 관련 보도 2회, 후보 관련 보도 37회, 정책 관련 보도 6회, 판세 관련 보도 6회, 선거 관련 보도 8회로 나타났다. 정당 관련 보도 2회는 새누리당 경선 관련 보도 2회로 분석되었다. 후보 관련 보도는 37회(62.7%)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책 관련 보도는 6회(10.2%)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 관련 보도는 3회로 모두 지역 정책과 관련된 보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신문(2012.10.24) :大選에 대구경북 없다>, <매일신문(2012.11.02) : 남부권 신공항 대구경북 대선 공약으로>, <매일신문

(2012.11.15) : 누가 돼도...다시 뜨는 신공항>의 3건의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2건은 신공항 관련 보도로 부산일보와 마찬가지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건은 지역 현안에 대해 공약을 내놓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기사임을 알 수 있다. 매일신문 2012년 10월 24일 1면 <大選에 대구경북 없다>의 기사에는 “부산은 이미 ▷해양수산물 부활 ▷가덕도 신공항 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호남은 23일 박 후보로부터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 ▷ 엑스포·F1 경기장 중심의 관광레저도시 건설 ▷새만금사업 전담기구 설치 등을 약속받았다. 제주도 역시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다.”라고 보도하며 대구지역은 부산과는 반대로 정책 관련 발언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보도 8건(13.6%)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판세보도는 6건(10.2%)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광주일보는 정당 관련 보도 12회, 후보 관련 보도 41회, 정책 관련 보도 7회, 판세 보도 6회, 선거 관련 보도 8회로 나타났다. 정당 관련 보도는 12건(16.2%)으로 나타났다. 정당 관련 보도를 살펴보자면 새누리당 경선 1회, 새누리당 예산 관련 보도 1회, 민주당 대선경선 보도 6회, 민주당 대선 캠프 관련 보도 3회, 민주당 정치쇄신 관련 보도 1회로 나타났다.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기사 비중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경선이 끝난 시점부터 조사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정당 보도가 많은 것에 대한 균형성을 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선이 끝난 시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경선 관련 보도는 제외된 반면 민주당 경선 보도는 포함되어 보도 횟수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 관련 보도에서는 보통 후보자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광주일보에서는 단일화 관련하여 당의 관점에서 보도한 기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광주일보 2012년 10월 19일 1면 <대선 D-60...야권 단일화 실패 우려 커가는 광주·전남 민심 “만형 민주당이 통 큰 결단 내려야”>의 기사는 두 후보(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하기보다는 당과 진보진영에게 통 큰 결단을 내리자는 촉구를 하는 기사다. 기사 내용에서도 “민주·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지엽적인 신경전에서 벗어나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라고 말하며 단일화에 대한 후보의 입장 보다는 당권 차원에서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보 관련 보도는 41회(55.4%)로 절반이상이 후보 관련 보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관련 보도는 7회(9.5%)임을 알 수 있었으며, 판세 관련 보도는 6회(8.1%)로 나타났다. 선거 관련 보도는 8회(10.8%)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일보는 정당 관련 보도 15회, 후보 관련 보도 60회, 정책 관련 보도 12회, 판세 보도 4회, 선거 관련 보도 13회로 나타났다. 총 104회로 1면에서 대선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인 신문의 광고면, 지면 비율, 사실면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면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신문사보다 많은 보도를 하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량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의 기사에서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일보 2012년 11월 21일 1면 <“충청 대선 공약 오리무중 지자체 속앓이”-각 후보캠프 대형 프로젝트등 전무 ‘홀대론’고개…구체적 밑그림 영·호남과 대조> 위의 기사 제목을 확인해보면 충청 관련 공약에 대한 부채를 논하고 있다. 또한 대전일보 관점에서 충청지역이 홀대받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기사 내에서 드러낸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으로 기사 비중이 높아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 했듯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관련 보도는 12회(11.5%)로 나타났으며, 정책 관련 보도 중 5건이 지역 관련 보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대전일보 기사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기사로 대전일보 2012년 11월 21일 1면 <충청 대선공약 오리무중 지자체 속앓이>이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충청 지역 홀대론에 따른 우려를 간접적으로 기사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 지역 관련 보도로 과학벨트 부지매입 관련 기사가 3회, 세종시 관련 보도 1회가 있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관련 공약이었으나, 결국은 원점 검토를 시사해 논란이 가중된 사업이었다. 이 같은 환경에 따라 충청지역은 해당 정책에 대한 공약 이행 여부와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관련 정책 기사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판세 보도는 4회(3.8%)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보도는 13회(12.5%)로 분석되었다.

경인일보는 정당 관련 보도 5회, 후보 관련 보도 28회, 정책 관련 보도 8회, 판세 보도 5회, 선거 관련 보도 5회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신문 중에서 최저 보도 횟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보도 8회중 6회가 지역관련 보도로 정책 보도에서 지역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일보와 마찬가지로 경인일보 또한 대선 공약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 보도가 있었다. 경인일보 2012년 11월 27일 1면 <막 오른 대선, 인천·경기는 안중에 없나>를 주제로 인천, 경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개발 공약이 실종되었다고 보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민심에 대한 목소리를 지역 신문이 대신하여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련 공약은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틀로써 지역 기반에 대한 발전과 기대가 달린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통해 지역 신문이 지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강원일보는 정당 관련 보도 16회, 후보 관련 보도 41회, 정책 관련 보도 5회, 판세 보도 8회, 선거 관련 보도 13회로 나타났다. 정당 관련 보도는 총 16회(19.3%)로 나타났다. 강원일보가 주로 다룬 내용은 경선 관련 보도로 관련 기사를 6회 보도하였으며 정당 관련 기사 중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보통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타 언론사나 신문사는 후보자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대선 전날 보도된 강원일보 2012년 12월 18일 1면 <‘24시간 전쟁’...여야, 지지층 투표 독려 안간힘> 기사를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으로 나눈 보도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후보 유세보다 당 차원에서의 보도,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 언론과는 다르게 대선전날 인물보다는 정당에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후보 관련 보도는 41회(49.4%)로 조사되었으며, 정책 보도는 5건(6.0%)으로 나타났다. 판세 보도는 8건(9.6%)으로 나타났으며, 선거관련 보도는 13건(15.7%)으로 확인 되었다.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를 교차 분석 실시한 결과 신문사간 주제 보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chi^2=28.433$, 자유도=20, $p>0.5$ 로 신문사별 주제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소 기대빈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도 1건(3.3%)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모든 신문이 후보자 관련 보도를 1순위로 보도하면서 도출된 결론일지도 모른다. 2순위 보도를 살펴보면 부산일보, 경인신문은 정책 관련 보도, 매일 신문은 선거 관련 보도, 광주일보, 대전일보, 강원일보는 정당 관련보도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슷한 보도 순서에 때문에 보도별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런 결과가 도출 된 것이 본 연구대상이 1면과 사설면에 한정된 결과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통 대선 관련 연구를 할 때 관세 보도의 비중이 많은 것에 대한 비판점이 생기는 결과를 확인한다면, 본 연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신문사들이 비슷한 보도 유형과, 순서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형화된 저널리즘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지역에서 주제 보도에 대해 비슷한 결과가 도출 된 것을 보면, 국내 신문들은 대선 보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신문이 가져야할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보도의 내용뿐 만 아니라 유형 또한 각 지역 신문사가 같고, 이에 대한 결과로 지역 신문과 중앙 신문이 차이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역 신문이 추구해야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후보 관련 보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번 18대 대선의 특수성의 문제도 함께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정수장학회, 역사 인식과 관련한 기사가 다수 보도 되었다. 또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보도 또한 비중이 높게 보도 되어 후보 관련 기사가 자연스레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이 다른 대선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는 강력한 두 야권후보의 단일화 과정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보도가 집중됨에 따라 후보 관련 보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독자가 가장 빠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후보 자체에 대한 보도 일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1면과 사설면의 후보자에 대한 기사 비중이 높아졌을 것이다. 다음은 사설면의 보도 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표 3> 신문사별 사설에서의 대선 보도 주제 (괄호 안은 지역 관련 보도 횟수)

	정당	후보	정책	선거	합계
부산	3 8.6%	14 40.0%	7(5) 20.0%	11 31.4%	35(5) 100%
매일	6 7.8%	46 59.7%	10 13.0%	15 19.5%	77 100%

광주	3(1) 33.3%	1 11.1%	2 22.2%	3 33.3%	9(1) 100%
대전	11 25.0%	17 38.6%	6(2) 13.6%	10(2) 22.7%	44(4) 100%
경인	2 6.5%	16 51.6%	1 3.2%	12 38.7%	31 100%
강원	0 0%	2(1) 6.9%	10(8) 34.5%	14(9) 48.3%	26(18) 100%
합계	25(1) 11.3%	96(1) 43.2%	36(15) 16.2%	65(11) 29.3%	222(28) 100%

교차분석 : $\chi^2=53.200$, 자유도=15 $p=0.000$

사실면을 분석한 결과 1면과는 다르게 선거 자체 보도, 단순 선거 관련 의견개진, 투표참여 독려, 선거 자체에 대한 비평기사가 1면 기사에 비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선거 관련 보도 29.3%). 하지만 사실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보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의 정당 관련 보도 3회, 후보 관련 보도 14회, 정책 관련 보도 7회, 선거 관련 보도 11회로 조사되었다. 정책 관련 보도 중 지역 관련 정책 보도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수부 부활, 가덕 신공항 대선공약 채택촉구, 에코델타시티, 지역공약 실천에 관련된 보도로 1면과 함께 지역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은 정당 관련 보도 6회, 후보자 관련 보도 46회, 정책 관련 보도 10회, 선거 관련 보도 15회로 총 77건의 대선 관련 보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사실 222건 분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비율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사마다 사실면에 게재하는 기사 건수가 다르고, 토요일에 발간하는 신문사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신문사도 있어, 기사 분량에서의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 힘든 점이 있다. 후보자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46건(59.7%)에 달하며, 정책 관련 보도 10건(13.0%)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사실면에서 지역 관련 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신문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물론 사실면이 아닌 오피니언이나 칼럼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면은 신문사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칼럼이나 외부 집필인이 작성하는 비중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매일신문이 사설면에서 지역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전 지역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역 신문이 대선기간동안 사설면에서 지역정책이나 지역 관련 보도가 없다는 사실은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 검증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낳게 만든다. 물론 다른 지면에서 다뤄질 수 있겠으나 신문사의 의견을 직접 전달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일보의 정당 관련 보도 3회, 후보 관련 보도 1회, 정책 관련 보도 2회, 선거 관련 보도 3회로 총 9건의 기사가 대선 관련 보도로 조사되었다. 정당 관련 보도는 민주당대선 경선 관련 보도 1회, 양-대선 캠프 핵심에 지역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논지의 보도와 새누리당에 대한 보도를 사설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단순한 숫자비교를 통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논하기는 힘들겠지만 타 지역 신문에 비해 지역 관련 정책이나 지역 관련 현안에 대한 사실의 부재는 지역민과 지역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전일보의 정당 관련 보도 11회, 후보자 관련 보도 17회, 정책 관련 보도 6회, 선거 관련 보도 10회로 총 44건의 대선 관련 보도로 조사되었다. 정당 관련 보도 주제는 새누리당과 선진 통일당에 대한 보도는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민주당 관련 사실은 확인 할 수 없었다. 물론 이슈에 따라, 혹은 사안에 따라서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기사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한 쪽만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만 다뤄진 것은 기계적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계적 형평성만을 맞추는 것도 선거 보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어떤 관점에서든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특정 정당에 대한 보도만 없는 것은 편향적 보도로 보일 수 있다. 후보 관련 보도는 17회(38.6%)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책면과 관련해서는 6회(13.6%)로 나타났다. 정책 관련 보도 6회중 2회는 지역 관련 보도로 하나는 세종시 대선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숙고하는 사실 대전일보 2012년 9월 26일 23면 <화려한 세종시 대선공약 고맙긴 하지만>이며 다른 기사는 대전일보 2012년 10월 30일 23면 <‘지방은행 설립’ 대선 공약 건의에 부처>라는 주제로 보도되었다.

경인일보의 정당 관련 보도 2회, 후보자 관련 보도 16회, 정책 관련 보도 1회, 선거 관련 보도 12회로 총 31건의 대선 관련 보도로 조사되었다. 정

당 관련 보도는 2건으로 민주당 경선 관련 보도 1회, 새누리당 관련 보도 1회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관련 보도에서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새누리당 관련 보도에서는 비판적 의견개진이 눈에 띈다. 2012년 9월 19일 경인일보 13면 기사 <새누리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의견은 “우리는 새누리당의 잇단 공천현금과 정치 자금 논란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추잡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당 내부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중략)…새누리당, 이제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비판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방적인 한쪽당의 편을 들어 우호적 태도나 혹은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잘못된 점을 짚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의 범위라고 판단된다. 교묘한 눈속임을 통해 우호적 의견 보도와 혹은 특정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직접 잘못된 점을 거론하며 사회에 알리는 점은 언론의 감시견의 역할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 관련 보도는 16건(51.6%)으로 나타났다으며, 정책 관련 보도는 1건(3.2%)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책 관련 보도는 선거공약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촉구하는 기사이다. 경인일보 2012년 11월 13일 23면 <쏟아지는 선거공약, 꼼꼼하게 따져볼 때>를 주제로 사설면에 보도되었으며,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유권자들의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강원일보는 정당 관련 보도 0회, 후보 관련 보도 2회, 정책 관련 보도 10회, 선거 관련 보도 14회로 총 26건의 대선 관련 보도로 조사되었다. 강원일보 보도 중 눈에 띄는 점은 정책 관련 보도 10회 중 8회가 지역과 관련된 보도라는 점이다. 이는 강원도가 그 동안 홀대 받아왔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 촉구에 대해 관심이 증가한 결과가 보도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중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알펜시아 리조트 국가매입,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하여 사설면에 보도 되었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설면에 단순 거론 3회, 직접 주제글로 작성된 기사 4회로 동서 고속화 철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설면에서 신문사간 주제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는 $\chi^2=53.200$, 자유도=15, $p<0.5$ 로 신문사간 사설면의 주제 보도의 차이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9셀(37.5%)로 표를 해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빈도수 자체가 적은데 따른 차이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2) 지역 관련 보도

<표 4> 지역 관련 보도 1면, 사설면

	부산	매일	광주	대전	경인	강원	합계
1면 보도	12	4	3	8	9	13	49
사설 보도	5	0	1	4	0	18	28
합계	17	4	4	12	9	31	77

부산 지역과 관련된 1면과 사설면의 주제를 검토해보았을 때, 부산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가덕 신공항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과 관련된 관심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당시 부산 시민들과 부산일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9월 말에 걸쳐 11월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공항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부산일보 지역 관련 보도
1면 보도

12/09/21	‘해양수산부 부활’ 대선정국 고삐완다
12/10/11	“해양수산부 폐지, 해양도시 부산 위상 추락”
12/10/30	신공항·해수부 부활 등 지역현안 정책대결 실종
12/11/01	끝내 ‘남부권 신공항’ 새누리, 부산 포기하나
12/11/10	부활하는 해수부 부산설치 가능성
12/11/12	安“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정대로 추진”
12/11/13	부산이나 수도권이나, 해수부 청사 입지 ‘쟁점’
12/11/15	文, ‘신공항’ 가덕에 사실상 방점
12/11/17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공약하라”
12/11/27	신공항 문제 막판 최대 변수 부상
12/12/04	‘가덕신공항’ 끝내 미확정…부산,朴 화법에 판정패
12/12/11	새누리 물문제·신공항 핵심 빠져 민주 도심철도 이전 등 13가지

사설면 보도

12/09/21	해수부 부활, 대선공약 채택이 우선
12/10/11	가덕신공항 대선 공약 채택 촉구, 이유 알고 있나

12/10/17	대선 판에 내몰리는 부산 시·구 의원들
12/11/05	안 후보는 에코델타시티를 환경문제로만 접근하나
12/12/11	여야 대선후보 지역공약 실천이 문제다

부산일보 2012년 10월 17일 31면 <대선판에 내몰리는 부산 시·구 의원들>이라는 주제로 보도된 기사는 부산지역에 있는 시·구 의원들에 대한 기사로 대선에서의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기사이다. 첫 문단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정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시·구 의원들에게 대통령 선거 운동 활동 상황을 적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도 매일, 전날 활동 사항 및 당일 계획을 낱알이 써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향후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적어내라’는 방식이 원색적이고 군대 상관이 하급자를 다루듯 해 시·구의원들은 ‘속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를 2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부끄럽고 뼈아프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의 어두운 면이다. 공천제라는 하나의 제도 덕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를 악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선거행태가 아니다. 언론은 이와 같이 지역 내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 지방자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발언은 정당정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우리사회에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이 근절 되려면 언론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잘못 된 점을 짚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언론은 더욱더 지역의 아픈 곳을 긁어내고 잘못된 점을 짚어주는 역할을 이행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표 6> 매일신문 지역 관련 보도

1면 보도

12/08/28	박근혜 대선조직에 지역출신 안 보인다.
12/10/24	大選에 대구경북 없다
12/11/02	남부권 신공항 대구경북 대선공약으로
12/11/15	누가 돼도...다시 뜨는 신공항

매일신문의 경우 지역 관련 보도가 총 4개의 기사로 확인 되었다. 첫 기사는 대선 조직에 대구경북 출신이 대부분 제외되었다는 기사이다. 매일신문 2012년 8월 28일 1면 <박근혜 대선조직에 지역출신 안보인다>의 기사

내용에서는 “지역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박후보가 TK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인사들이 표 나게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역주의 혹은 지역중심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지역 출신인사가 많이 포함 될수록 해당 지역에 대해 정책이나 공약 실천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의 인물로 구성되는지와 상관없이 정책집행과 수립은 공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사는 지역현안에 대한 공약기사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구경북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뒤의 두 기사는 부산 지역과 중첩된 사안으로 신공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의 1면을 단순 비교해보면 해당 지역에 신공항 문제가 서로의 이슈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표 7> 광주일보 지역 관련 보도

1면 보도

12/09/19	호남후보 없는 대선 차분한 관망
12/11/08	지역발전 이끌 ‘그랜드 비전’ 없다
12/12/11	새누리·민주 광주·전남 대선공약 확정

사설면 보도

12/11/01	새누리 ‘호남구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	-------------------------

광주일보의 지역 관련 보도는 총 4건으로 조사되었다. 광주일보 2012년 11월 1일 19면 <새누리 ‘호남구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의 기사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불모지’인 호남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그 진정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삭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거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면과 사설면에서 지역 관련 기사가 많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도 그 반대이다. 1면과 사설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심도 있는 기사가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표 8> 대전일보 지역 관련 보도

1면 보도

12/10/30	“지방자치 실현 참 인물 기대”
12/11/06	대전 충청 민심잡기 빅3, 공약 있나없나
12/11/15	과학벨트, 국책사업 맞긴 맞나
12/11/16	대전 빅3 충청권 공약 눈치보기
12/11/21	충청 대전공약 오리무중 지자체 속앓이
12/11/28	“과학벨트 부지매입 先국고지원”
12/11/29	“세종, 사실상 행정수도 만들것”
12/11/30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충청권 공약실현주목

사설면 보도

12/09/26	화려한 세종시 대전공약 고맙긴 하지만
12/10/30	‘지방은행 설립’ 대전공약 건의에 부처
12/11/06	충청권 대전 비중 미약한 현실 자문해 봐야
12/11/09	충청 현안 공약화, 헛물 켜는 일 없으려면

대전일보는 지역 관련 보도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1면은 주로 공약에 대한 보도를 한 반면 사설면에서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을 보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설면에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논의를 꺼내고 있다. 대전일보 2012년 11월 9일 27면 <충청 현안 공약화, 헛물 켜는 일 없으려면>의 기사에서는 “이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들로 지역 정치권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충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기 위한 제일의 전제 조건은 지역여론이 여야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되었느냐의 여부다. 충청 주민들 요구 사항을 ‘여럿중하나(one of them)’정도로 여기지 않도록 논리로 무장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주입시키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신문이 지역 정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선에서 지역 관련 공약을 실천하려면 지역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촉구 보도이다. 지역 관련 보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이와 같이 정책에 대한 검증과 지역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을 촉구하는 기사는 지역 언론이 수행해야 할 하나의 역할로서도 중요하다. 단순히 공약을 보도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정치권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지역민을 대변하여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지역 언론이 행해야할 임무이기 때문이다.

<표 9> 경인일보 지역 관련 보도

1면 보도

12/09/19	인천에도 본격 ‘대선 바람’ 분다
12/10/11	‘인천시 현안’ 대선 공약화 착수
12/10/23	文“인천·경기, 경제수도로 육성”
12/10/24	인천 찾은 안철수 대선후보 ‘지역 핵심 어젠다’ 건네 받아
12/11/27	막오른 대선, 인천·경기는 안중에 없나
12/11/29	“제3연륙교 조기건설 공약 포함을”
12/11/30	朴 “亞게임 적극 지원하겠다”
12/12/11	朴 亞게임 성공 개최지원 거리유세 내용반영‘7대 인천공약’ 발표
12/12/17	투표만이 ‘인천의 힘’ 키운다

경인일보는 지역 관련 보도를 총 9회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사실면에서는 지역 관련 보도가 없었으며 1면에서 다뤄졌다. 첫 번째 기사 경인일보 2012년 9월 19일 1면 <인천에도 본격 ‘대선 바람’ 분다>와 경인일보 2012년 12월 17일 1면 <투표만이 ‘인천의 힘’ 키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공약 관련 기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책·공약 검증에 대한 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사실전달 보도로 해당 후보나 당의 입장에서 발표한 공약을 그대로 실어 나르고 있다. 검증 보도 없이는 앵무새 저널리즘 혹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검증 관련 보도는 지역 언론이 짊어진 숙제이다. 정책에 대한 확인과 이를 검증하는 절차 없이는 지역 현안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기 힘들다. 단순히 지역 관련 정책이나 공약을 보도한다고 해서 지역을 잘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이나 확인 없이는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 하는 것이다. 철저한 비판과 현실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것이 선거를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길이다.

<표 10> 강원일보 지역 관련 보도

1면 보도

12/08/30	강원항공·은행 설립 지역공동체 복원
12/09/10	캐스팅보트 활용해 ‘강원도 미래 바꾸자’
12/09/14	“동계 경기시설·인프라 지원 최선”
12/10/12	朴·文·安 중앙선대위에 ‘강원도는 없다’
12/10/19	朴-文 ‘강원대첩’ 주도권 경쟁 본격화
12/10/22	대선공약 ‘재탕 삼탕’

12/10/22	소설가 이외수 “대선주자들 강원도 챙겨라”
12/10/29	강원·충청 ‘朴 우세’ PK ‘文·安 약진’
12/10/30	강원도 뭇 챙기기 ‘캐스팅보트’만으로 안 된다
12/11/06	강원도 표심이 대권 가른다
12/11/15	“강원 핵심 사업 대선 공약으로”
12/11/29	강원일보·도내 3대 방송사 공동 ‘강원도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
12/12/12	18대 대선 도내 유권자수 123만 5,187명

사설면 보도

12/09/11	대선, ‘강원도 3% 벽’ 뛰어넘는 계기 만들자
12/09/18	강원도, 소외·낙후의 껍질 벗고 진화 꿈꾸자
12/09/21	대선 회오리…도 정치권, ‘주민 편’에 줄서라
12/10/19	대선 주자들의 강원도에 대한 인식과 약속
12/10/23	밑그림 없는 공약으로 민심 얻을 생각 말라
12/10/29	도 현안 해결, 대선후보에 당당히 요구하자
12/11/02	강원도 뭇은 ‘유권자 3%’가 뚝뚝 뭉칠 때 나와
12/11/05	춘천~속초 고속철 지연은 ‘역사의 빛’ 된다
12/11/19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인식과 약속
12/11/26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강원도 인식
12/11/27	강원도 ‘3% 표심’ 뚝뚝 뭉쳐 미래로 달리자
12/12/04	대선후보들, 알펜시아 정부 매입 약속해야
12/12/08	국회의원 수, 면적 등 지역 특수성 반영돼야
12/12/10	‘3% 표심’ 뚝뚝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고속철 해결
12/12/12	동서고속철, 국가 선도사업 약속 왜 못하나
12/12/13	열악한 SOC로 ‘강원도 대선공약’ 이룰 수 있나
12/12/14	‘강원도 길’ 하나 뚫는 사업 결정에만 20년 걸려
12/12/19	표심 결집해 역동적인 ‘강원도 힘’ 보여주자

강원일보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할당하여 지역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대변해주기도 한다. 18대 대선에서 강원지역 관련정책이나 이슈가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관련 이슈와 정책이 많이 생겨났다고기보다, 강원일보 스스로가 강원도에 대한 관심추구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촉구보도, 그리고 공약 이행 기사를 다수 보도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선시 강원지역이 어떤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강원일보는 지역민과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기사 31건 중 절반에 가까운 보도가 정책, 공약 관련 기사로 대선정책과 공약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보도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면서 각 지역 신문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도를 통해 드러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분석도 중 각 신문사마다 지역 홀대에 대해 반박하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표 11> 지역 홀대에 반박하는 기사 사례

12/10/30	신공항·해수부 부활 등 지역현안 정책대결 실종(부산일보, 1면)
12/10/24	大選에 대구경북 없다(매일신문, 1면)
12/08/28	박근혜 대선조직에 지역출신 안 보인다.(매일신문, 1면)
12/11/08	지역발전 이끌 ‘그랜드 비전’ 없다(광주일보, 1면)
12/11/06	대선 충청 민심잡기 빅3, 공약 있나없나(대전일보, 1면)
12/11/06	충청권 대선 비중 미약한 현실 자문해 봐야(대전일보, 사설)
12/11/21	충청 대선 공약 오리무중 지자체 속앓이(대전일보, 1면)
12/11/27	막오른 대선, 인천·경기는 안중에 없다(경인일보, 1면)
12/10/12	朴文安 중앙선대위에 ‘강원도는 없다’(강원일보, 1면)

지역 신문들은 각자의 지역기반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정책이 실종되었거나 부실하다는 논지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강원일보, 매일신문의 경우 정책 및 공약 기사 이외에 대선 캠프에 지역을 대표하는 출신 성분의 인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기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각자의 지역 신문은 지역 홀대를 걱정하며 정책 촉구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강원일보는 지역정책이나 홀대에 관한 기사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강원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강원일보의 지역 정책에 대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과 지역대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관련 사안을 다루고 대변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의, 혹은 지역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강원일보의 사설면의 지역 관련 기사 중 9건을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일보 2012년 10월 23일 7면 <밀그림 없는 공약으로 민심 얻을 생각 말라>, 강원일보 2012년 10월 29일 7면 <도 현안 해결, 대선후보에 당당히 요구하자>, 강원일보 2012년 11월 5일 7면 <춘천~속초 고속철 지연은 ‘역사의 빔’ 된다>, 강원일보 2012년 11월 26일 7면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강원도 인식>, 강원일보 2012년 12월 4일 7면 <대선후보들, 알펜시아 정부 매입 약속해야>, 강원일보 2012년 12월 10일 7면 <‘3% 표심’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고속철 해결>, 강원일보 2012년 12월 12일 7면 <동서고속철, 국가 선도사업 약속 왜 못하나>, 강원일보 2012년 12월 13일 7면 <열악한 SOC로 ‘강원도 대선공약’ 이룰 수 있나>, 강원일보 2012년 12월 14일

7면 <‘강원도 길’ 하나 뚫는 사업 결정에만 20년 걸려>, 강원일보 2012년 12월 19일 7면 <표심 결집해 역동적인 ‘강원도 힘’ 보여주자>로 총 9건의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숙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원일보는 위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공약 요구 및 정책 이행에 대한 촉구만 강요하고 있다. 물론 강원도가 개발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홀대 받은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정책이나 공약에 적극적인 것은 지역 언론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역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나 논의는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 특히 지역을 대변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지역 관련 사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공정성이란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필요하고,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만을 위한 지역 신문이 된다면, 언론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후보 보도

① 후보 보도 횟수

<표 12> 신문사별 후보 보도 횟수

신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합계
부산	38	37	25	3	103
	36.9%	35.9%	24.3%	2.9%	100%
매일	47	41	40	3	131
	35.9%	31.3%	30.5%	2.3%	100%
광주	19	32	29	2	82
	23.2%	39.0%	35.4%	2.4%	100%
대전	29	50	54	3	136
	21.3%	36.8%	39.7%	2.2%	100%
경인	28	32	29	2	91
	30.8%	35.2%	31.9%	2.2%	100%
강원	39	49	30	2	120
	32.5%	40.8%	25.0%	1.7%	100%
합계	200	241	207	15	663

	30.2%	36.3%	31.2%	2.3%	100%
--	-------	-------	-------	------	------

교차분석 : $\chi^2=16.932$, 자유도=15 $p=0.323^{5)}$

위의 조사된 표본은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기사 안에 포함되었다면 모두 포함시켰으며 후보자에 대한 비중의 높낮이 없이 기사 내에서 후보자가 등장하였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해 보도한 것으로 코딩하였다.

부산일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를 하였고, 2순위는 문재인 후보, 마지막은 안철수 후보의 순서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도를 하였으며, 2순위는 문재인 후보, 3순위는 안철수 후보 순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일보의 문재인 후보를 가장 많이 보도 하였으며 그 다음은 안철수 후보, 마지막은 박근혜 후보로 조사 되었다.

대전일보의 안철수 후보를 가장 많이 보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재인, 박근혜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의 문재인 후보를 가장 많이 보도 하였으며 2순위로 안철수 후보, 3순위로는 박근혜 후보 순으로 보도되었다.

강원일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도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박근혜 후보, 3순위는 안철수 후보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매일신문은 세 후보 중 박근혜 후보에 대해 가장 많이 보도 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광주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는 문재인 후보를 가장 많이 보도하였고 대전일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에 대한 보도횟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문재인 후보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분석에서 다루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중첩적인 보도, 안철수 후보와의 중첩적인 보도를 통해 보도 횟수가 증가 하였을 뿐, 후보자를 단독으로 보도한 횟수에서는 타 후보자들보다 3배 가까이 적은 양이 보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경선 시점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분석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전체 사례를 비교 한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의 한 계라고도 할 수 있다.

5) 이정희 후보자를 제외한 교차 분석 결과에서는 : $\chi^2=16.534$, 자유도=10 $p=0.085$ 로 나타났다. 두 결과 모두 신문사간 후보자 보도 횟수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② 신문사별 후보 보도 횟수에 대한 상세 분석

<표 13> 신문사별 후보 보도 횟수 상세분석

	박	문	안	이	박+ 문	문+ 안	박+ 안	박+ 문+ 안	박+ 문+ 이	박+ 문+ 안+ 이
부산	12	4	9	1	15	7	0	9	2	0
매일	25	4	16	3	14	16	1	7	0	0
광주	6	3	9	1	10	17	1	1	0	1
대전	10	3	17	2	9	28	0	9	1	0
경인	11	2	10	0	9	13	0	6	2	0
강원	6	5	2	1	15	11	0	17	1	0
합계	70	21	63	8	72	92	2	49	6	1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면의 표21~26을 참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기사 안에 포함되었다면 모두 포함시켰으며 후보자에 대한 비중의 높낮이 없이 기사 내에서 후보자가 등장하였다면 보도한 것으로 코딩하였다.

<표 12>의 신문사별 보도 횟수는 복수코딩으로 인해 한 기사 내에서 다양한 후보가 보도 되었을 경우 후보자별로 동시에 코딩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한 기사 내에서 한 후보자만을 다루었는지 혹은 두 후보자를 동시에 다루었는지 혹은 다양한 후보자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해당 후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작업을 가졌다.

기사 내용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료로 부록면의 <표 21~26>을 첨부해 두었다. 분석대상은 기사의 내용에 대한 확인으로 부록면의 <표 21~26>의 기사 제목과 후보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사 제목으로 시작해서 박근혜 후보를 기사 말미에 다루는 경우, 본 분석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다룬 기사로 포함시켰다.

후보자에 대한 단독기사 보도 항목을 확인하면 박근혜 후보가 70건의 기

사로 가장 많은 보도 횟수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표 12>의 후보 보도 횟수 자료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는 다르다. 그 다음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63건으로 두 번째를 이었으며 문재인 후보는 21건으로 확인되었다. 한 기사 내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보도한 기사 분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비해 3배 가까이 적은 기사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후보자에 관해서는 인혁당 인식, 정수 장학회, 당내 경선, 정책 등 다양한 면에서 후보를 다루었으나,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대선행보, 출마와 관련된 보도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자는 주로 안철수 후보자와 박근혜 후보자 혹은 세 후보자가 동시에 나온 기사보도가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안철수 후보자와 동시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단일화 관련 주제에 관한 보도가 많았고, 박근혜 후보와는 유세, 판세의 보도가 많았다.

문재인 후보자를 단독으로 보도한 횟수가 다른 후보보다 적은 것은 균형성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자 사이에 끼어 보도 횟수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기사 내 후보자에 대한 단독보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횟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등장한 기사는 92건으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보도한 기사로 총 72건의 기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기사 내에 동시에 보도 된 92건의 기사 중 73건의 기사가 단일화 관련 보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두 후보가 다양한 방면에서 다뤄지기 보다 단일화라는 주제가 두 후보를 동시에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판세 보도부터 유세, 비방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이어질 후보자에 대한 주제별 확인에서는 <표 12> 신문사별 후보 보도 횟수 자료에 근거하여 특정한 분류를 통해 기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기사 주제에 대한 구분은 최영재(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바꾸었음을 미리 밝힌다.

<표 14>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분석표

		박	문	안	이	박+ 문	문+ 안	박+ 안	박+ 문+ 안	박+ 문+ 이	박+ 문 + 안+ 이
부산	유세	0	0	0	0	8	0	0	1	0	0
	관세	0	0	1	0	3	0	0	5	0	0
	검증	6	1	3	0	1	0	0	0	0	0
	정책	3	1	2	0	1	0	0	2	0	0
	일반	3	2	3	1	2	7	0	1	2	0
매일	유세	1	1	0	0	3	0	0	0	0	0
	관세	1	0	0	0	5	0	0	0	0	0
	검증	11	2	7	0	3	4	0	1	0	0
	정책	4	1	4	0	2	0	0	4	0	0
	일반	8	0	5	3	1	12	1	2	0	0
광주	유세	1	1	1	0	2	0	0	0	0	0
	관세	0	0	0	0	3	2	0	1	0	0
	검증	2	0	0	0	0	0	0	0	0	0
	정책	1	0	0	0	2	0	0	0	0	0
	일반	2	2	8	1	3	15	1	0	0	1
대전	유세	0	0	0	0	1	1	0	0	0	0
	관세	0	0	0	0	3	0	0	1	0	0
	검	3	0	2	0	0	1	0	0	0	0

	증										
	정	4	1	1	0	3	0	0	2	0	0
	책										
경인	일	3	2	14	2	2	26	0	6	1	0
	반										
	유	1	0	0	0	2	0	0	0	0	0
	세										
	관	0	0	0	0	3	1	0	1	0	0
강원	세										
	검	3	0	1	0	0	0	0	1	0	0
	증										
	정	3	1	0	0	0	0	0	0	0	0
	책										
합계	일	4	1	9	0	4	12	0	4	2	0
	반										
	유	0	0	0	0	2	0	0	3	0	0
	세										
	관	0	0	0	0	4	0	0	4	0	0
총합	세										
	검	1	0	0	0	0	0	0	0	0	0
	증										
	정	1	0	0	0	1	1	0	2	0	0
	책										
합계	일	4	5	2	1	8	10	0	8	1	0
	반										
	유	3	2	1	0	18	1	0	4	0	0
	세										
	관	1	0	1	0	21	3	0	12	0	0
총합	세										
	검	26	3	13	0	4	5	0	2	0	0
	증										
	정	16	4	7	0	9	1	0	10	0	0
	책										
합계	일	24	12	41	8	20	82	2	21	6	1
	반										
	유										
	세										
	관										
총합		70	21	63	8	72	92	2	49	6	1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부산일보의 보도횟수부터 먼저 살펴보겠다. 부산일보의 경우 <표 12> 신문사별 후보 보도횟수의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 - 문재인 후보 - 안철수 후보 순으로 후보에 대한 기사량이 조사되었으나 단독보도를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 - 안철수후보 - 문재인 후보 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후보자마다 기사의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단독 보도 기사 횟수는 12건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후보의 기사주제를 살펴보자면, 12/09/12 ~ 12/10/22일까지의 6건의 기사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검증보도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정보에 대한 3건의 기사는 새누리당내 경선 관련 기사이며, 3건의 기사는 지역정책과 관련된 기사로 확인 되었다.

문재인 후보의 단독 보도는 총 4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정보 2건의 기사는 경선 관련 기사이며 1건은 정책 관련 기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건의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사로 분석 되었다.

안철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단독 보도 9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정보 3건은 모두 출마와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 판세보도 1건, 후보 검증 3건과 정책보도 2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보도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관한 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서는 15개의 기사 중 유세보도 8회, 판세 보도 3회, 일반 정보 보도 2회, 후보자 검증 보도 1회, 정책 보도 1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에서는 7개 기사 모두가 단일화 관련 기사로 일반정보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정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는 2건 모두 TV토론과 관련된 예고성이나 발언과 관련된 기사로 확인 되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서는 판세 보도 5회, 정책 보도 2회, 유세 보도 1회, 일반 정보 1회로 나타났다.

매일 신문의 경우 <표 12> 자료의 경우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후보자 단독 보도의 경우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순서로 나타났다. 단독보도 횟수는 박근혜 후보가 가장 많은 25건의 기사를 차지하였고 안철수 후보가 16회, 다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4회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일반 정보 보도 8회로 나타났으며, 일반 정보 보도 중에서는 경선관련 보도 3회, 이명박 대통령-박근혜 후보자 회동 보도 1회, 정당 내 쇄신 관련 보도 3회, 호남 지역에 대한 보도 1회로 나타났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11회로 나타났으며 주로

인혁당 인식,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책 관련 보도는 4회이며, 판세관련 보도는 1회, 유세 보도 1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기사 4건 중 3건이 사설 보도로 나타났다. 주제는 후보자 검증 보도 2건, 유세 보도 1건, 정책 및 공약 관련 보도 1건으로 조사되었다.

안철수 후보는 총 16건의 기사로 확인되었는데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사설면에 실린 기사로 확인 되었다. 기사 주제는 후보 검증 보도는 7회, 정책 관련 보도 4회, 일반 정보 보도 5회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에서는 유세 보도 3회, 판세 보도 5회, 후보 검증 보도 3회, 정책 관련 보도 2회, 일반 정보 1회 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는 총 16건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16건의 보도 중 검증보도는 4회, 일반 정보 보도는 12회로 나타났다. 16건의 보도 중 11건이 후보 단일화관련 보도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광주일보의 경우 <표 12> 신문사별 후보 보도 횟수의 조사에서는 기사 횟수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 순서로 확인 되었으나 단독 보도 된 순서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은 9건으로 확인 되었고 박근혜 후보자가 6건, 문재인 후보자가 3건으로 확인 되었다.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정보 2회(경선 관련 보도 1회, 호남 지방과 관련된 보도 1회), 후보 검증 보도 2회(인혁당 관련 보도 1회, 새누리 예산관련 보도 1회), 정책 보도 1회, 후보 유세 보도 1회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정보 보도 2회(경선관련보도 2회), 유세 보도 1회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자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일반 정보 보도 8회(새누리당과 안철수 후보자간 불출마 관련사건 보도 1회, 출마 입장에 대한 보도 3회, 단일화 논의 보도 2회, 문재인 후보에 대한지지 입장 관련 보도 2회), 후보 유세 보도 1회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서는 일반 정보 보도 3회로 나타났으며 유세보도 2회, 판세보도 3회, 정책보도 2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서는 일반 정보 보도 15회(단일화 관련보도 13회, 단일화 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보도 2회) 판세보도 2회(단일화전 판세보도 1회, 단일화 후 판세보도 1회)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전일보의 경우 후보자 단독보도로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 10건의 기사 보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3건의 기사보도,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 17건의 기사보도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정보 보도 3회(경선 관련 보도 1회, 박근혜-이인제 통합연대 관련 보도 1회, 과학벨트 발언에 대한 보도 1회)로 나타났다. 후보 검증 보도 3회(정수장학회 보도 2회, 인혁당 보도 1회)로 나타났으며 정책 관련 보도 4회(지역관련-과학벨트 3회, 세종시 관련보도 1회)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정보 보도 2회(경선관련 보도 2회), 정책 관련 보도 1회(지역 관련-과학벨트보도 1회)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정보 보도 14회(출마 관련 보도 8회, 행보 보도 1회, 세종시 관련 보도 1회, 단일화 후 후보자 개인에 관련된 보도 4회)로 나타났다. 후보자 검증보도 2회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책관련 보도 1회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서는 유세 보도 1회, 판세 보도 3회, 일반 정보 보도 2회, 정책 및 공약 보도 3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에서는 일반 정보 보도 26회(단일화 관련보도 23회, 단일화후 안철수 후보자의 문재인 지지에 대한 일반 정보 보도 2회, 경선 관련보도 1회)로 나타났다. 단일화관련 보도 중 후보 검증 보도 1회를 확인 할 수 있었고, 文-安 공동 유세 보도 1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인일보의 경우 후보자 단독 보도로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 11건의 기사 보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2건의 기사 보도,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 10건의 기사보도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자 단독 보도는 유세 보도 1회, 후보 검증 보도 3회, 정책 보도 3회, 일반 정보 보도 4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자의 단독 보도는 일반 정보 보도 1회(민주당내 경선 관련 보도), 지역정책 보도 1회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 정보 보도 9회(후보자 개인에 대한 보도 6회, 출마관련 보도 3회), 후보 검증 보도 1회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에서는 유세 보도 2회, 판세 보도 3회, 일반 정보 보도 4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에서는 일반 정보 보도 12회(단일화 관련 보도 10회,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관련 보도 1회, 후보관련 보도 1회), 판세관련 보도 1회로 나타났다.

강원일보의 경우 박근혜 후보자 단독 보도 6회, 문재인 후보 5회, 안철수 후보 2회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 후보 검증 보도 1회, 정책 보도 1회, 일반 정보 보도 4회로 나타났으며, 문재인 후보는 5회 모두 일반 정보 보도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일반 정보 보도 2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는 정책 보도 1회, 유세 보도 2회, 판세 보도 4회, 일반 정보 보도 8회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는 정책 보도 1회, 일반 정보 보도 10회(단일화 관련 보도 9회, 단일화후 후보지원에 대한 보도 1회)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서 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5> 후보자내 보도 비율

	유세	판세	검증	정책	일반	합계
박근혜	25 12.5%	34 17.0%	32 16.0%	35 17.5%	74 37.0%	200 100%
문재인	25 10.4%	36 14.9%	14 5.8%	24 10.0%	142 58.9%	241 100%
안철수	6 2.9%	16 7.7%	20 9.7%	18 8.7%	147 71.0%	207 100%

교차분석 : $\chi^2=60.215$, 자유도=8 $p=0.000$

보도 횟수 자체에서는 <표 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일반정보 보도가 58.9%, 71.0%로 박근혜 후보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보도가 중첩적인 코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인지 모른다. 또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동시에 다룬 보도에서는 대다수가 단일화 관련 보도를 차지하며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정책에 관련한 사항에서는 비교적 적은 보도를 하였다.

박근혜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반 정보 보도 74회(37.0%)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에서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박

근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분배를 통해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문재인, 안철수 후보자에 관해서는 일반정보, 특히 단일화 관련 보도에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③ 신문사별 후보 보도 태도

<표 16> 신문사별 후보 보도 태도

신문	후 보 태 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합계
부산	긍정	0	0	0	0	0
	부정	3	0	0	0	3
	중립	35	37	25	3	100
	총합	38	37	25	3	103
매일	긍정	0	0	0	0	0
	부정	1	1	5	2	9
	중립	46	40	35	1	122
	총합	47	41	40	3	131
광주	긍정	0	0	0	0	0
	부정	0	0	0	0	0
	중립	19	32	29	2	82
	총합	19	32	29	2	82
대전	긍정	0	0	0	0	0
	부정	0	0	0	1	1
	중립	29	50	54	2	135
	총합	29	50	54	3	136
경인	긍정	0	0	0	0	0
	부정	0	0	1	0	1
	중립	28	32	28	2	90
	총합	28	32	29	2	91
강원	긍정	0	0	0	0	0
	부정	0	0	0	0	0
	중립	39	49	30	2	120
	총합	39	49	30	2	120

위의 자료는 후보자에 대한 사안을 보도 할 때 이를 긍정, 우호적 보도, 중립적 보도, 부정적, 비판적 보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부산일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보도 0회, 부정적 보도 3회, 중립적 보도 100회로 조사되었다. 부산일보는 박근혜 후보자에 관해 비판적인 보도가 3회 있었다. 첫 번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는 부산일보

2012년 9월 12일 31면 <과거사 인식에 발목 잡혀서 국민통합 할 수 있나>로 확인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사실면에 보도 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유력한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이 위태위태하다” …중략… “더욱이 사실관계의 왜곡과 사법체계에 대한 무지마저 드러난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중략… “박후보는 결국 “대법원 판결(재심)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이미 뱉은 말은 역사인식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실망스럽다”, “역사인식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글에서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용한 첫 마디가 기사 서두에 언급된 문장이다. 첫 문장에서부터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현재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특수성 때문에 역사인식에 대한 정보까지 대선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이슈 보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검증차원에서라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부산일보 2012년 10월 22일 31면에 게재된 <박근혜 ‘정수’ 해법 국민이 납득할 만해야>라는 주제로 사실면에 실린 기사이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거나,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중략…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은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회견 내용을 대선 캠프내 극소수 참모들만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략… 근본적 문제는 공당 대선 캠프의 논의 구조가 공개적이지 않다는데 있다.”라고 다루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만을 발췌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편집에 의한 비판적 기사로 오인 될 수 있으나, 기사 전반적 내용과 주제에 부합해 보았을 때 비판적 기사라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 대상에 포함 시켰다. 또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소통의 부재와 준비 부족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기사는 특이하게도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는 사실면이 아닌 1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산일보 2012년 10월 4일 1면 <‘가덕신공항’ 끝내 미확정… 부산, 朴 화법에 판정패>의 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지역현안과 관련한 목소리를 직접 대변한 기사이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기사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부산 유세에서 나온 박 후보의 발언은 두 가지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

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는 발언과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첫 번째 발언은 이전에 언론에서 밝힌 내용으로 가정법을 동원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밀양이 최고라고 한다면 밀양으로 할 것'이라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김해공항 가덕 이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박 후보의 화법, 즉 말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의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발언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추후에 문제가 발생 시 한발 뻗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런 점을 직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보통 1면은 스트레이트 기사로 구성되는데 반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와 같은 발언은 단순 사실 나열보다 기사에 대한 의견개진이 부분적으로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일보의 후보 보도 태도는 대체로 중립적 보도를 견지하였으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3회 있었다. 2개의 기사는 박근혜 후보 검증 차원에서의 기사였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보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보도는 올바른 보도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분석 대상이 1면과 사설 면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보도가 필요 한 것이다.

매일신문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보도 0회, 부정적 보도 9회, 중립적 보도 122회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기사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보도 1회, 문재인 후보에 대해 1회, 안철수 후보에 대해 5회, 이정희 후보에 대한 비판적 보도 2회로 부산일보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와 관련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는 매일신문 2012년 9월 12일 27면 <박근혜 인혁당 인식, 이치에 맞지 않다>를 주제로 작성된 사설이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1975년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는데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박 후보의 태도는 역사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략... 박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과거사를 딸로서 감싸려는 것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 후보로서 할 말은 아니다. 박 후보가 되려고 하는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소호할 의무가 있으며 박 후보의 거듭되는 역사 인식 발언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후보는 자질, 능력, 정책 못지않게 올바른 역사인식이 지도자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설에서 밝히고 있다. 직접적으로 박

근혜 후보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하며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비판적 보도는 매일신문 2012년 11월 9일 31면 <‘일자리 만들어 성장’, 경제 공약의 함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사 말미에서는 “표가 아무리 급해도 ‘듣보잡’ 경제 이론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신문 기사에서 ‘듣보잡’이라는 등재되지 않은 단어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기사에서도 현시대에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듣보잡’이라는 단어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용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기사 지면에서 등장해도 올바른 용어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과격한 단어 선정은 지양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도 되었다. 첫 번째 기사는 매일신문 2012년 9월 24일 27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라>의 기사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모호한 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 출신답게 멋있어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그런 어휘들로 구성된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 하다. ...중략... 이런 ‘안철수식’ 어법은 콘텐츠 부족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를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해줘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다...후략...”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언급된 첫 번째 줄인 “교수 출신답게 멋있어 보이는 말은 늘어 놓았지만”과 같은 언어 사용은 비판적 태도라기보다 비꼬는 말투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과 후보 검증에 있어서 비판은 언론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점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비난과 비판과의 경계는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사실은 매일신문 2012년 9월 27일 27면<다운계약서, ‘착한 안철수’의 드러나는 언행 불일치>로 과거 있었던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 드러난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판적 기사이다. 이어지는 세 번째 기사는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사실이다. 매일신문 2012년 9월 28일 31면 <하고 싶은 말만 한 안철수의 사과 기자회견>을 주제로 작성된 사실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태도와 앞서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어 비판하는 기사이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자세는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오만이 워한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국민 앞에 완전히 발가벗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이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필요조건이다. 그것이 싫다면 대선에 나서지 말아야한다.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장님이 되라는 소리다.”라고 논하며 안철수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기사이다.

마지막 기사는 매일신문 2012년 11월 5일 27면 <안철수, 이번에는 4대강 보 철거인가>라는 주제로 작성된 사설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4대강 철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기사이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4대강 대형 보 철거’ 공약은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대선의 한 단면이다. 실패 조사를 벌여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방점은 철거에 두어져 있는 듯하다. 22조 원이란 천문학적 사업비가 들어갔고 공정률 98%로 사실상 종료된 사업에 대해 이렇게 간단히 ‘원위치’를 입에 올리는 그 용기가 놀랍다. ...중략... 과연 안후보는 철거를 말하기 전에 이런 평가 작업을 했는가? 그것은 후보 능력 밖이다. 안후보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다.”고 사설에서 밝히고 있다. 안 후보의 포퓰리즘을 꼬집는 비판적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정희 후보와 관련한 비판적 기사는 2건으로 확인 되었다. 첫 번째 기사는 매일신문 2012년 9월 4일 31면 <이정희 전 공동대표, 대선 출마하지 말라>로 이정희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더욱이 지금의 통합 진보당 상황을 보면 이 전 공동대표의 대선 출마 언급은 너무나 염치 없고 상식 밖임을 알 수 있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말하고 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본 기사는 이정희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로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매일신문 2012년 11월 16일 31면 <이정희, 무슨 염치로 야권연대를 말하나>의 기사로 본 기사 또한 이정희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점을 가지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을 발췌하면 “이 후보는 진보의 가치와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의 한 사람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처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염치로 야권연대와 헌신을 거론하며, 진보의 분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이 후보는 묵언 참회부터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할때까지.”라고 직접적으로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가 처해 있는 문제점과 현실을 결부하여 해당 후보를 비판하는 사설로 판단하여 비판적 기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일신문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 1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 1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 5회, 이정희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 2회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매일신문은 각 후보자에 대해 최소 1번은 비판적 보도를 하였으나 1면과 사설면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가장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무소속 후보로써 많은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적 면을 확인 할 수 없어 후보 검증 및 정책 검증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검증에서도 직접적으로 “교수 출신답게 멋있어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그런 어휘들로 구성된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는 국민은 별로 없을 듯 하다”와 같은 발언은 비판보다는 비꼬는 표현에 가깝다. 또한 문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듣보잡 정책”과 같은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다. 사설면에서 의견 개진은 자유롭지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혹은 불리한 보도를 할 수 없는 만큼 매일신문은 이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은 보도는 안철수 후보자나 문제인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역 여론이 실제로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 신문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하에 기사 보도에 있어서 균형성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기계적 균형성을 맞추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판 기사와 해당 후보자에 대해 보다 많은 검증 사안을 요한다면 균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일신문이 속해 있는 대구 지역은 박근혜 후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여론이 박근혜 후보자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지만 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에서 균형적인 보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광주일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보도, 부정적 보도를 찾을 수 없었으며 비교적 균형성 있는 보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전일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보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중립적 보도 135회, 부정적 보도 1회를 사설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보도는 이정희 후보와 관련한 보도로 조사되었다. 해당 기사는 대전일보 2012년 12월 17일 23면 <이정희 전 후보의 참 나쁜처신> 사설이다. 본 기사는 이정희 후보가 대선 사퇴를 밝힌 직후 보도되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의욕이 충만했던 이 후보의 사퇴는 어이없고 비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진심으로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결집하여 정권교체를 원했다면 진보정의당처럼 애초에 특정후보와 연대하거나 적어도 안철수 전 후보처럼 후보등록에 앞서 진퇴를 결정했어야 한다. 돈은 돈대로 받고 TV에서 할 말은 다한 뒤 사퇴한 것은 혈세를 좀먹고, 유권자를 헛갈리게 하고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사설에서 밝히고 있다. 기사 제목에서도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비판적 논조의 사설이다. 대전일보에는 이정희 후보관련 기사 1건을 제외하고는 비판적 기사나 특정후보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경인일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보도 0회, 부정적 보도 1회, 중립적 보도 90회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기사는 사설면의 안철수 후보 관련 기사이다. 경인일보 2012년 9월 7일 17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진 안철수의 장외행보>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기사 내용은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한 사설이다. 본 기사에서 공보위원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 안철수 후보 때문이라는 논지의 글로 이어진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 원장의 장외행보가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여야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웬만한 검증은 다 거쳐 벌거벗은 임금님의 형국이다. 하지만 안 원장은 장외에 머물면서 최근에 제기된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본인 입으로 딱 부러진 해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중략… 안 원장의 장외 신비주의가 오히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진흙탕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 안철수 후보 때문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후보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보도가 1회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강원일보는 긍정적 보도 0회 부정적 보도 0회 중립적 보도 120회로 후보자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문사들은 균형적 있는 보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매일신문과 부산일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의 경우 박근혜 후보에게 보다 부정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의 경우 당시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된 관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보도한다면, 균형보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일신문의 경우 안철수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기사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매일신문은 특히 박근혜 후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으로, 이와 같은 보도 형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보도 혹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보도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법상 사설면이나 오피니언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 보도에 있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불리한 보도, 혹은 비판을 넘어선 비난적 보도는 선거에 있어서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역할에 합당하지 않다.

④ 지역 득표율과 후보자에 대한 보도

지역별 득표와 후보자에 대한 보도횟수를 살펴보기 위해 앞선 <표 12> 후보자에 대한 보도 횟수 중 다른 후보를 제외한 박근혜, 문재인 후보만을 토대로 보도 비율을 측정해보았다. 분석 자료가 복수코딩을 통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이정희 후보자에 대한 수치가 빠진다고 해도 특별히 박근혜,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기사 측정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득표율과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지역별 18대 대선 득표율

		박근혜	문재인
부산일보(부산)		59.8%	39.9%
매일신문(대구)		80.1%	19.5%
광주일보	전남	10.0%	89.3%
	전북	13.2%	86.3%
	광주	7.8%	92.0%
대전일보	충남	56.7%	42.8%
	충북	56.2%	43.3%
	대전	50%	49.7%
경인일보	경인	50.4%	49.2%
	인천	51.5%	48%
강원일보(강원)		62%	37.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⁶⁾

<표 18> 신문사별 후보에 대한 보도율 차이

신문사	박근혜	문재인
부산일보	50.7%	49.3%
매일신문	53.4%	46.6%
광주일보	37.3%	62.7%
대전일보	36.7%	63.3%
경인일보	46.7%	53.3%
강원일보	44.3%	55.7%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에 한해서는 지역별 득표율과 보도 비율이 동일한 순서대로 나타났으나 대전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에 한해서는 다

6)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정보, <http://info.nec.go.kr/>

르게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토대로는 후보자에 대한 보도 횟수와 지역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대선후보 선거 보도에 따른 문제점

앞서 신문사별 후보 보도 태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산일보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 3회, 매일신문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관하여 각각 부정적 보도 1회,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보도 5회, 이정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보도 2회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순히 수치만 놓고 확인한다면 부산일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신문은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 보다 부정적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이 부각되는 이유는 당시 18대 대선이 TK(대구·경북)지역과 PK(부산·경남)지역으로 나누어진 구도와 이와 관련한 지역 표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부산 사상구 의원이었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 출생이라는 부산 지역 연고가 있었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지역민들의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일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매일신문도 안철수 후보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많은 불균형성을 보여주었다. 단지 몇 개의 기사를 통해 신문사 전체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해당 지역의 신문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 할 수 있었다. 대통령 선거 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관련된 사안을 대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후보에 관련하여 부정적이나 혹은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점이 눈에 띄는 것은 이번 대선이 PK(부산·경남)지역과, TK(대구·경북)지역 이 중요한 변수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언론은 이와 같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의 차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역민의 여론은 특정 후보에 대해 우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으나, 언론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점을 배제하고 각각의 후보에 대해 공정한 잣대로 보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정성은 지역관련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역관련 보도에서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강원일보의 경우 지역 관련 보도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 관련 보도 이외에서도 강원일보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표 2~3>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에서 선거관련 보도(1면, 사설면) 중 강원지역에 관련된 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강원일보- 선거관련 보도 中 지역 관련 보도

강원일보		
1면	12/09/10	캐스팅보트 활용해 ‘강원도 미래 바꾸자’
사설	12/09/11	대선, ‘강원도 3%백’ 뛰어넘는 계기 만들자
사설	12/10/19	대선 주자들의 강원도에 대한 인식과 약속
1면	12/10/22	소설가 이외수 “대선주자들 강원도 챙겨라”
사설	12/10/29	도 현안 해결, 대선후보에 당당히 요구하자
1면	12/10/30	강원도 뭇 챙기기 ‘캐스팅보트’만으로 안 된다
사설	12/11/02	강원도 뭇은 ‘유권자 3%’가 뚝뚝 뭉칠 때 나와
1면	12/11/06	강원도 표심이 대권 가른다
사설	12/11/17	‘동계스포츠지구’ 정부 매입, 알펜시아 회생길
사설	12/11/27	강원도 ‘3% 표심’ 뚝뚝 뭉쳐 미래로 달리자
사설	12/12/10	‘3% 표심’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 고속철 해결
1면	12/12/12	18대 대선 도내 유권자수 123만 5,187명
사설	12/12/14	‘강원도 길’ 하나 뚫는 사업 결정에만 20년 걸려
사설	12/12/19	표심 결집해 역동적인 ‘강원도의 힘’ 보여주자

앞선 지역 관련 보도에서도 다루었지만 강원일보는 지역현안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보도를 1면과 사설면에서 하고있다. 선거 관련 보도(1면, 사설면) 27개중 14개의 보도가 지역과 관련된 보도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비율로 본다면 51.8%로 선거관련 보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선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특정 후보에 대한지지,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표 몰아주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로 있어왔다. 그것 이외에도 대형 국책사업이나 정책 공약이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으로 유리한 공약과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지역 언론이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한웅·엄기열(2010, p.472)의 연구에서는 “예컨대 지난 20여 년 동안 끌어오다 2005년 11월 2일 실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산, 포항, 영덕, 경주 등 후보지 4곳이 위치한 경북과 전북지역 일간신문들이 보도한 1면과 사설을 보면 지역 언론의 지역주의적 보도성향을 감지할 수 있다. 불과 2년 전인 2003년 11월에는 무정부상태까지 몰고 가며 “우리지역은 절대 안된다”던 불안사태까지 불러일으킨 바로 그 방사성폐기장 선정문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2005년 11월에는 “반

드시 우리지역으로 와야 한다”로 바뀌었고 그 선봉에 각 지역 언론도 가세했다. 기사와 사실 및 헤드라인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지역일간지의 지역주의적 보도경향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 시킨다는 비난과 아울러 지역 언론들이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주체라고까지 하는 주장을 가능케 하기도 하겠다”라고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언론에 대해 논하고 있다.

강원일보도 이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원지역이 그동안 정책이나 개발, 발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해온 사실이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정책과 이를 위한 수립방향을 검증하는 보도보다 유권자들에게 뽕뽕 뭉쳐 표심으로 보여주자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사 내용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식의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해당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것을 이행이나 공약으로 삼지 않으면 그 후보를 뽑지 않겠다는 반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지역의 국책 사업을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진다. 앞선 한국 언론의 선거 보도 문제점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주의에 대해 잠시 다루었지만, 정책이나 공약이 탈락하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보통 해당 정당에 대한 반발이 거센 형태로 지역주의가 나타난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후보자, 정당에 대한 반발심으로 다음 대선이나 투표에서 반대 정당에 대해 투표를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강원일보가 이 같은 사안을 부추기는 보도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원일보 2012년 11월 2일자 7면 보도 <강원도 뭉은 ‘유권자 3%’가 뽕뽕 뭉칠 때 나와>, 강원일보 2012년 11월 27일자 7면 <강원도 ‘3% 표심’ 뽕뽕 뭉쳐 미래로 달리자>, 강원일보 2012년 12월 10일 7면 <‘3% 표심’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 고속철 해결>의 세 건의 기사는 투표를 통해 강원도에 가져다 줄 실익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지역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으며, 이전 강원도가 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떠나 지역 여론을 조장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원일보와 관련하여 <표 2~3> 신문사별 대선보도 주제의 선거 관련 보도를 확인하면서 선거 관련 보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분석에 대한 전체 표를 부록면의 <표 27~32>에 게재해두었다. 선거 관련 보도 기사를 확인하면서 특징적인 몇 개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TV토론 개선에 대한 보도를 세 개의 신문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표 20> TV토론 개선에 대한 기사 사례

부산일보		
1면	12/12/05	“맥빠진 TV토론” 개선 여론
사설	12/12/05	형식에 발목 잡힌 TV토론, 방법을 바꿔라
매일신문		
사설	12/12/17	정책 대결 펼친 양자 TV토론, 제도 개선도
대전일보		
사설	12/11/13	대선후보 TV토론 사라진 희한한 선거관
사설	12/11/29	대선후보 TV양자토론 ‘조합’ 더 만들면 돼
사설	12/12/06	주객이 뒤바뀐 듯한 대선 TV토론
1면	12/12/12	맥빠진 TV토론 “시간이 아깝다”

선거 관련 보도 121개의 기사 중 7개의 기사가 TV토론개선 관련 기사로 비중은 5.7% 정도로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세 개의 매체에서 동시에 이와 같은 주제에 다룬 것을 확인 할 때, TV토론에 대한 개선 여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대선시 TV토론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매체이다. TV토론은 직접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후보자의 목소리, 이미지, 정책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선거에서 가장 비중 있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러한 TV토론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며, 정책대결이 실종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선거 문제점에 대한 사안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역여론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다. TV토론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지만, 신문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켜봐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유권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사는 향후 선거에서 있을 TV토론을 위해 보다 나은 방향 제시와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이나 숙고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18대 대선에 있어서 지역 언론이 이전 대선 보도에서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지역 신문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제 18대 대선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 신문들의 1면 주제 보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1면 보도에서 대선에 대한 주제 보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를 조심스레 예측해보면 모든 지역 신문이 후보자에 대한 보도횟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모든 신문사가 후보자에 대한 보도 비율이 가장 높아 주제별 보도 횟수 차이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로 18대 대선에서 지역 신문은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역 신문간 대선 주제 보도에 대해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기보다 어느 정도 정형화된 주제 보도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실면에 있어서 주제 보도를 교차 분석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했으나, 신문사마다 신문 지면의 크기가 다르고, 토요일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신문이 있고, 광고 면의 유무등 지면상 외형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선불리 판단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빈도수 자체가 적고 보도 횟수가 0회가 있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 이를 명확히 차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 우리나라 지역 언론이 대선 보도 주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 대선은 선거 보도에 있어서 후보 중심적인 보도를 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신문사별 대선 보도 주제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 관련 보도 비율이 1면과 사실면에서 절반에 가까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었듯, 후보자간 정책이나 이념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후보 개인에 대해 집중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 개인 비리에 대한 검증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일 것이다. 후보자 개인이 청렴하지 못하고, 후보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 공개되어 국내 대선 후보 보도와 같이 의혹이 의혹을 낳는 식의 진행은 거의 없다고 한다(이승철외, 2007).

이 같은 점을 보면 국내 언론이 후보자의 비리, 과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보도하는 양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대선시 언론이 이와 같은 정보를 밝혀주는 형태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여 국내 대통령 보도의 특성상, 인물의 비중이 높게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 보도는 여-야 간의 대결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역대 대선 중에서도 독특한 형태의 대선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소속 후보자가 예상치 못한 지지를 받고 야권 후보자간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역대 선거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점이었다. 또한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이전 16대, 17대 대통령 선거보다 높아진 것을 투표율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⁷⁾ 이와 같은 관심이 정책이나 공약 검증과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데 반해, 대선 보도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집중 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에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지역 신문은 다양한 보도를 통해 지역 관련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의 경우 신공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동시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각자의 지역 홀대에 반박하는 기사를 보여주며, 대선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을 각각 표출해 주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지역신문은 보도에 있어서 지역신문 고유의 특징을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보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 수치상으로는 강원일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원일보의 경우 지역 관련 관심을 다양하게 표출한 것은 좋지만 다른 신문에 비해 지역주의,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신문은 지역에 기반을 둔 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높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 특히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역에 대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보도에 있어서 정책 검증과 확인보다 정책집행 추구를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뽕뽕 뭉쳐 표심으로 보여주자는 식의 보도 행태는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강원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지역적인 보도에 집중한 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문사별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후보자

7)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 70.8%,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63.0%,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 75.8%

에 대한 사항을 살펴 본 결과 신문사별 후보 보도횟수에서 문재인 후보를 가장 많이 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안철수 후보, 3순위는 박근혜 후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한 기사 내에서 어떠한 후보자에 대해 보도 하였는가를 상세 분석하고 이를 주제별로 확인한 결과 후보자에 대한 단독 보도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철수 후보자는 2순위로 확인 되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주제 보도를 연구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반정보 보도의 비율이 높았으나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세-판세-후보검증-정책-일반정보에 대한 비율이 타 후보에 비해 균형성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자만 단독 보도된 횟수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는 것은 상대적 불균형성을 논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자와 함께 보도가 된 경우가 많아 문재인 후보가 보도 횟수 자체가 많지만, 후보자에 대해 단독으로 보도된 횟수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 3배 가까이 적은 사실을 확인하면, 문재인 후보 개인에 대한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신문의 후보 보도에 대한 태도를 분석 한 결과 직접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성향을 나타내는 보도는 확인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의 보도는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의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신문은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매일신문의 보도 중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발언으로 ‘듣보잡 정책’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대선후보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아무리 한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용어사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면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정책에 대한 사안을 검증하고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할 길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비난을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부산일보도 마찬가지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같은 여지를 남기기 전에 언론은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선 후보 선거 보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선 연구에서 밝혔듯 이번 연구 결과의 문제점은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보도를 한 점과, 강원일보가 보여준 지역이기주의 보도

형태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일보, 매일신문은 서로 지역연고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립적 보도를 보여주었으나, 그렇지 않은 반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는 대선 후보 보도가 균형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강원일보의 경우에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보다는 해당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 표출로 표심으로 뚝뚝 뭉쳐 보여주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지역만을 위한 기사가 다양하게 보도되면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매일신문과 부산일보를 제외한 신문사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보도를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대선 보도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판세 보도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 기간이 4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 때문인지 아니면 1면과 사설면에 한정된 지면에 대한 연구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판세 보도 비율은 8.7%로 이전 연구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대선 보도시 후보자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소속해 있는 정당과 또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정책논의, 공약에 대한 검증차원의 보도를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1면과 사설면을 포함하여 대선 보도 지면전체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신문의 대선 보도 지역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강상현(1993.6),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지역성, 한국언론정보학보, p.29.
- 구교태(2008.12), 방송사유형별 선거방송보도의 특성과 지역주의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8권, p.162.
- 권혁남(1996.6), 선거와 경마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p.132~133.
- 권혁남(1999.9),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선거 보도분석, 韓國言論學報 43.5 (1999): 13-17.
- 권혁남(2006.6), 한국언론 선거보도 특성,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오택섭외, p.394.
- 김영태(2009), 한국의 선거와 출신지역, 현재정치연구, p.61~85.
- 김진하(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현대정치연구 제 3권 2호, p.107.
- 김종철, 강원택, 김정하, 이승철, 구보타(2007.9), 대선후보 검증보도, 관훈저널 106, p.61~82
- 남지나, 최윤정(2010.7),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보도 비교, 한국방송학보 24, p.87.
- 노동렬(2012.12), 신문의 선거 보도 행태와 사진이미지 활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8호, p.164.
- 박홍수(1986.7), 지방자치시대의 언론의 역할, 신문과 방송 통권187호, p.31~34.
- 안차수(2006.6), 5.31 지방선거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p.56~57.
- 안철현(2004.4), 16대 대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 p.80~81.
- 양승찬(2004.2), 총선보도 이것만은 고쳐보자 : (2) 경마식보도, 신문과 방송, p.48~59.
- 언론노동조합 노보(2013.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노보-99호, p.4.
- 이승철(2007.3), 변화하는 미국의 대선보도 경향, 관훈저널 103, p.166~171.
- 이정춘(1992.1), 선거보도의 관행과 언론의 구조적 모순,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비평 7, p.36.
- 이한웅, 엄기열(2010.6), 지역언론의 지역주의적 보도성향에 관한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학연구 10권 p.472.
- 이효성(2002.10), 언론의 특정 후보지지 : 찬반론과 선거법을 중심으로 : 후보 공개지지는 의견과 사실의 엄격한 분리, 언론발전에 기여, 저널리즘

비평, p.30.

임동욱(1998.1), 광주·전남 지역의 15대 대선 보도, 저널리즘 비평 23, p.50.

임영호(2011.6), 지역언론에 나타난 지역 이기주의, 관훈저널, p.67~70.

장원석(2001.08), 인터넷과 미국의 선거운동. 법과 정책 제 7호.

장호순(2003.12), 지역신문과 언론자유,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2, p.142.

제임스 리서(1996.10), 美정부와 정치에 관한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p.239.

조철래(2009.9), 영호남 지역신문의 지역주의 보도연구, 언론과학연구 9, p.514.~515

채백 (1998.1), 부산지역 언론의 15대 대선보도, 저널리즘비평 23, p.42~43.

최영재, 홍성구(2004),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p.330.

최영재(2013.2), 지역언론 대선보도의 규범과 현실, 부울경언론학회, 언론학연구 17(1), p.277~296.

최영재(2007), 신문 대선보도 분석 : 형식적 균형 속에 숨은 “편파적 편집”, 신문과 방송, p.16~23

허만섭(2008.02),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 공격' 보도 자료의 기사화 요인 :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p.17~22

황근(2001.10), 방송의 선거 이슈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p.27.

Hahn, Kyu, Shanto Iyengar, and Helmut Norpoth.(2002), "*Consumer demand for election news: The horserace sells.*"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Boston. Vol. 30.

Platz, Maria(2010.12), *The Politics of Election Coverage A Content Analysis of Indiana's Two Largest Newspapers During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_ A Thesis. Diss. University of Missouri.

Strömbäck, Jesper, and Daniela V. Dimitrova(2006), "*Political and Media Systems Matter A Comparison of Election News Coverage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1.4, 131-147.

참고 기사

강원일보(2012.10.23), 밀그림 없는 공약으로 민심 얻을 생각 말라, 7면.
강원일보(2012.10.29), 도 현안 해결, 대선후보에 당당히 요구하자, 7면.
강원일보(2012.11.02), 강원도 뭇은 ‘유권자 3%’가 똥똥 뭉칠때나와>, 7면.
강원일보(2012.11.05), 12/11/05 춘천~속초 고속철 지연은 ‘역사의 빛’ 된다, 7면.
강원일보(2012.11.26),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강원도 인식, 7면.
강원일보(2012.11.27), 강원도 ‘3% 표심’ 똥똥 뭉쳐 미래로 달리자, 7면.
강원일보(2012.12.04), 대선후보들, 알펜시아 정부 매입 약속해야, 7면.
강원일보(2012.12.10), ‘3% 표심’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 고속철 해결, 7면.
강원일보(2012.12.10), ‘3% 표심’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고속철 해결, 7면.
강원일보(2012.12.12), 동서고속철, 국가 선도사업 약속 왜 못하나, 7면.
강원일보(2012.12.13), 열악한 SOC로 ‘강원도 대선공약’ 이룰 수 있나, 7면.
강원일보(2012.12.14), ‘강원도 길’ 하나 뚫는 사업 결정에만 20년 걸려, 7면.
강원일보(2012.12.18), ‘24시간 전쟁’...여야, 지지층 투표 독려 안간힘, 1면.
강원일보(2012.12.19), 표심 결집해 역동적인 ‘강원도 힘’ 보여주자, 7면.
경인일보(2012.09.07),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안철수의 장외행보, 17면.
경인일보(2012.09.19), 새누리당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13면.
경인일보(2012.11.13), 쏟아지는 선거공약, 꼼꼼하게 따져볼 때, 23면.
경인일보(2012.11.13), 쏟아지는 선거공약, 꼼꼼하게 따져볼 때, 23면.
경인일보(2012.11.27), 막오른 대선, 인천·경기는 안중에 없나, 1면.
광주일보(2012.10.19), “만형 민주당이 통 큰 결단 내려야”, 1면.
광주일보(2012.11.01), 새누리 ‘호남구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19면.
뉴시스(2012.12.20), [되돌아본 18대대선①]전문가들 "정책이슈 완전 실종...맛있는 선거,
http://www.news1.co.kr/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1219_0011700883
대전일보(2012.09.26), 화려한 세종시 대선공약 고맙긴 하지만, 23면.
대전일보(2012.10.30), ‘지방은행 설립’ 대선공약 건의에 부쳐, 23면.
대전일보(2012.11.09), 충청 현안 공약화, 헛물 켜는 일 없으려면, 27면.
대전일보(2012.11.21), 충청 대선공약 오리무중 지자체 속앓이, 1면.
대전일보(2012.12.17), 이정희 전 후보의 참 나쁜처신, 23면.

매일신문(2012.08.28), 박근혜 대선조직에 지역출신 안 보인다, 1면.
매일신문(2012.09.04), 이정희 전 공동대표, 대선 출마하지 말라, 31면.
매일신문(2012.09.12), 박근혜 인혁당 인식, 이치에 맞지 않다, 27면.
매일신문(2012.09.24),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라, 27면.
매일신문(2012.09.27), 다운계약서, '착한 안철수'의 드러나는 언행 불일치, 27면.
매일신문(2012.09.28), 하고 싶은 말만 한 안철수의 사과 기자회견, 31면.
매일신문(2012.10.24), 大選에 대구경북 없다, 1면.
매일신문(2012.11.02), 남부권 신공항 대구경북 대선공약으로, 1면.
매일신문(2012.11.05), 안철수, 이번에는 4대강 보 철거인가, 27면.
매일신문(2012.11.09), '일자리 만들어 성장', 경제 공약의 함정, 31면.
매일신문(2012.11.15), 누가왜도...다시 뜨는 신공항, 1면.
매일신문(2012.11.16), 이정희, 무슨염치로 야권연대를 말하나, 31면.
부산일보(2012.09.12), 과거사 인식에 발목 잡혀서 국민통합 할 수 있나, 31면.
부산일보(2012.10.04), '가덕신공항' 끝내 미확정...부산,朴 화법에 판정패, 1면.
부산일보(2012.10.17), 대선판에 내몰리는 부산 시·구 의원들, 31면.
부산일보(2012.10.22), 박근혜 '정수' 해법 국민이 납득할 만해야, 31면.
부산일보(2012.10.30), 신공항 해수부 부활등 지역현안 정책대결실종, 1면.
부산일보(2012.11.10), 부활하는 해수부 부산설치 가능성, 1면.
부산일보(2012.11.17),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공약하라", 1면.
부산일보(2012.11.27), "신공항 문제 막판 최대 변수부상", 1면.
부산일보(2012.12.04), '가덕신공항' 끝내 미확정...부산,朴 화법에 판정패, 1면.

부록

<표 21> 부산일보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박근혜 후보		
1면	12/08/20	박근혜, 대선후보 오늘 확정, 본격 ‘대선’
1면	12/08/21	“국민대통합 길 열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출
사설	12/08/21	박근혜 후보, 소통 넓혀 국민통합 실천해야
사설	12/09/12	과거사 인식에 발목 잡혀서 국민통합 할 수 있나
1면	12/09/14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퇴진 요청
1면	12/09/24	“5·16, 유신, 인혁당 사건 헌법가치 훼손”
사설	12/09/25	박 후보가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려면
1면	12/10/22	박근혜, 굳게 닫힌 역사 인식
사설	12/10/22	박근혜 ‘정수’ 해법 국민이 납득할 만해야
1면	12/11/10	부활하는 해수부 부산 설치 가능성
1면	12/11/13	부산이나 수도권이나, 해수부 청사 입지 ‘쟁점’
1면	12/12/04	‘가덕신공항’ 끝내 미확정 ... 부산, 박 화법에 판정패
문재인 후보		
1면	12/08/27	민주 경선 파행 오늘 정상화 고비
1면	12/09/1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
사설	12/09/17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과제
1면	12/11/15	文, ‘신공항’ 가덕에 사실상 방점
안철수 후보		
사설	12/09/07	‘안철수 불출마 종용설’ 진실 밝혀 책임 물어야
1면	12/09/18	안철수 원장 내일 대선 출마 선언 잡스식 PT로
1면	12/09/19	안철수 출마 오늘 공식화 추석 앞둔 대선정국 출렁
1면	12/09/20	야권 후보 단일화, 대선 최대 변수
사설	12/09/20	안철수가 제시해야 할 정책과 비전
사설	12/09/28	안철수 후보 검증,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
사설	12/10/08	안철수 비전 선언, 정책 선거로 가는 계기로
사설	12/11/05	안 후보는 에코델타시티를 환경문제로만 접근하나
1면	12/11/12	安 “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정대로 추진”
이정희 후보		
사설	12/12/17	이정희, 남은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마땅
박근혜 + 문재인		
1면	12/09/07	朴-安 ‘네거티브 공방’ 확산 일로
1면	12/09/28	추석 민심 잡기 소리 없는 전쟁
1면	12/11/26	朴VS文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1면	12/11/29	간헐 지지율 누가 먼저 뚫을까

사설	12/11/29	양자 TV토론으로 ‘민낯’보여줘야
1면	12/11/30	“상대 텃밭을 내 텃밭으로” 표심 끌기 사활
1면	12/12/01	“첫 주말 표심 잡아라”…박·문 치열한 유세 공방
1면	12/12/03	朴 45.3% 문 40.4% 부동층 13% 예측 불허
1면	12/12/08	朴·文, 오늘 두 번째 ‘주말 대회전’
사설	12/12/11	여야 대선후보 지역공약 실천이 문제다
1면	12/12/12	박근혜 46.3% 문재인 40.3%
1면	12/12/14	고정표는 다지고 부동표는 당기고
사설	12/12/14	네거티브 공세에 표심 흔들리지 않는다
1면	12/12/15	비방전 과열…오늘 명운 건 서울 유세전
1면	12/12/18	朴·文 ‘경부선 유세’ 마지막 불꽃
문재인+ 안철수		
1면	12/11/06	대선구도 지각 변동 文-安 ‘단일화’ 독대
1면	12/11/07	후보등록 전 단일화 합의
사설	12/11/16	단일화 정국 오래가면 국민 피로감만 늘어난다
1면	12/11/17	文-安 정면충돌…주말 양측 회동 가능성
1면	12/11/21	文-安, 오늘밤 10시 단일화 TV토론
1면	12/11/22	文-安 단일화 담판 회동
1면	12/11/23	文·安 단일화 협상 오늘 중대 고비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1면	12/12/10	오늘 저녁 8시 대선후보 2차 TV토론
사설	12/12/10	민생 주제 2차 토론, 분명한 차별성 보여줘야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1면	12/09/10	대통령 누가 적합한가?
1면	12/09/18	대선 후보들 ‘지방 정책’ 딜레마
1면	12/09/28	박근혜 45.5 < 문재인 47.0 … 박근혜 42.6 < 안철수 5.01
1면	12/10/02	추석이후 표심 어디로 흐를까
1면	12/10/29	내일 대선 D-50…관세는 여전히 ‘오리무중’
1면	12/11/07	朴·文·安 모두 ‘공약’ 해양수산부 부활한다
1면	12/11/21	연령별지지 후보 뚜렷 2012대선은 ‘세대 경쟁’
1면	12/11/24	안철수 사퇴, 중도표 어디로 … 후보자
1면	12/12/07	금요일 부산이 들썩인다

<표 22> 매일신문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박근혜 후보		
1면	12/08/20	새누리 ‘대선 레이스’ 스타트 오늘 첫 여성 대통령후보 발표
1면	12/08/21	박후보, 김해 봉하마을 첫 방문
1면	12/08/21	박근혜 84% 득표 역대경선 최고기록

1면	12/08/22	YS와 양금 씻을까...박근혜 '포용행보' 계속
사설	12/08/23	통합 행보 박근혜, 진정성 더 보여주어야
1면	12/08/28	박근혜 대선조직에 지역출신 안보인다
사설	12/08/28	박근혜, 전태일 재단 헛걸음에도 계속 시도를
사설	12/09/03	이-박 회동 의미 있지만, 선거 중립 되새겨야
사설	12/09/12	박근혜 인혁당 인식, 이치에 맞지 않다
1면	12/09/14	박근혜 "남부권 신공항 반드시 재추진"
1면	12/09/24	"5·16, 유신, 인혁당 헌법가치 훼손"
사설	12/09/25	박근혜 사과, 과거 상처 치유로 나아가야
1면	12/09/27	박근혜 '텃밭' 대구경북서도 안심 못할 판
사설	12/09/28	대구 찾은 박근혜 후보에게 바란다
사설	12/10/06	"박 후보 제외하고 모두 물러나라"의 의미
1면	12/10/08	'쇄신 고민' 깊어가는 박근혜
1면	12/10/09	새누리당 갈등 수습 국면?
사설	12/10/09	시험대 오른 박근혜, 정치력 발휘하라
1면	12/10/17	박근혜 '정수작학회'도 늦잡치나
사설	12/10/22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논란 더 키웠다
1면	12/11/06	朴 "집권 후 4년 중입제 개헌"
1면	12/11/16	"기존 순환출자 인정, 신규는 금지"
1면	12/11/22	朴 정책 행보 맞바람
1면	12/11/27	국민 면접 본 박근혜 후보의 숙제
1면	12/12/06	호남 공들이는 朴, 10% 벽 깨나
문재인 후보		
사설	12/09/17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김중대에 올랐다
1면	12/09/18	문재인 첫 지방방문 경북 성주로
사설	12/10/23	문재인의 정치쇄신 방안, 정치권 함께 고민을
사설	12/11/09	'일자리 만들어 성장', 경제 공약의 함정
안철수 후보		
사설	12/08/25	퇴로 차단된 안철수 스타일 정치
사설	12/09/07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공방과 사실 검증
사설	12/09/13	안철수 교수, 대선 출마하려면 의구심 풀어줘야
1면	12/09/20	안철수, 대권 도전 완주할까
사설	12/09/20	안철수, 정치 쇄신 구체적 비전 제시해야
사설	12/09/24	안철수 후보는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라
사설	12/09/27	다운계약서, '착한 안철수'의 드러나는 언행 불일치
사설	12/09/28	하고 싶은 말만 한 안철수의 사과 기자회견
사설	12/10/08	안철수 정책 비전, 실천 구체성 뒤따라야
사설	12/10/11	무소속 대통령론은 정치적 착시현상
사설	12/10/22	안 후보, 강제한다고 일자리 늘지 않아
사설	12/10/30	안 후보, 간이과세 확대는 포퓰리즘이다
사설	12/11/05	안철수, 이번에는 4대강 보 철거인가
사설	12/11/24	'안철수 현상'이 남긴 과제

1면	12/12/05	安바람 타는 야권
1면	12/12/06	오락가락 安, 새 정치? 구태?
이정희 후보		
사설	12/09/04	이정희 전 공동대표, 대선 출마하지 말라
사설	12/11/16	이정희, 무슨 염치로 야권연대를 말하나
1면	12/12/10	TV토론 변수 이정희 ‘입심’ 주목
박근혜+ 문재인		
1면	12/10/13	朴-文 ‘NLL’ 정면 대치
사설	12/11/17	다시 떠올라야 할 신공항
1면	12/11/20	대구경북, 朴 상대는 文?
사설	12/11/26	박·문 후보, 시대 과제 놓인 미래 바라보길
1면	12/11/27	20% 넘는 부동산, 누가 가져갈까
1면	12/11/28	“누가 안보를 잘 할 수 있는가”
사설	12/11/28	탕평 인사 공약,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면	12/11/30	‘文의 안방’ 표다지는 朴 ‘朴의 텃밭’ 훑어가는 文
1면	12/12/03	朴 지지율 우세, 文 오차범위 밖 따돌려
사설	12/12/10	정치 쇄신하려면 제도 개선 함께 이뤄내야
1면	12/12/12	朴46.3%, 文 40.3% … 격차 더 벌어져
1면	12/12/13	朴-文격차, 6.8% ~ 0.5%P
1면	12/12/15	朴 “준비된 여성 대통령 부각” 文 “역전 마지막 승부처 총력”
1면	12/12/18	朴 “즉시 국정 이끌 후보” 文 “지난 5년간 실정 심판”
문재인+ 안철수		
1면	12/09/17	대구경북 ‘文·安 사람’ 누구?
사설	12/10/15	문재인·안철수, 봉변 이유 생각해보길
사설	12/10/24	야권 후보 단일화, 정권 장악 방편 되지 말아야
1면	12/11/06	文-安 회동, 수준 높은 합의문 나올까
사설	12/11/06	야권 후보 단일화, 공개적으로 빨리 매듭지어야
사설	12/11/12	문-안 종합정책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사설	12/11/13	후보 단일화 협상, 토론회등 추가 필요
사설	12/11/15	단일화 협상 중단, 서둘러 재개해야
사설	12/11/19	문·안 후보, 대선 정상화 위해 단일화에 속도를
사설	12/11/20	문·안 후보, 어떻게 연대하겠다는 것인가
1면	12/11/22	文·安 단일화 ‘답판’
사설	12/11/23	깊은 실망감 남긴 문·안 단일화 협상
1면	12/11/24	安 빠진 대선 … 朴-文 대결 본격화
1면	12/11/26	불안한 ‘안심’
1면	12/12/07	朴 vs 文+ 安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사설	12/12/07	문·안 대선 연대, 구체적 설명 필요하다
박근혜 + 안철수		

1면	12/08/24	박근혜 행보에 안철수도 채비 ‘커지는 대선판’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1면	12/10/08	‘지방 분권’ 기치 든 안철수
사설	12/10/13	박·문·안 후보는 지방분권 입장 밝혀야
1면	12/10/20	박근혜↔문재인↔안철수
1면	12/11/10	“남부권 신공항 건설 정치적 고려 절대 없다”
사설	12/11/13	정치쇄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사설	12/11/14	대선 후보 빅3, 대구경북 홀대 심하다
1면	12/11/15	누가돼도...다시 뜨는 신공항

<표 23> 광주일보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박근혜 후보		
1면	12/08/21	새누리 대선후보 박근혜 선출
1면	12/09/25	“5·16, 유신, 인혁당 헌법 가치 훼손”
1면	12/10/31	새누리, 예산으로 진정성 보여라
1면	12/11/07	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1면	12/11/14	박근혜 ‘호남 총리’ 카드 현실화 될까
1면	12/12/06	“호남의 눈물 닦아주는 대통령 되겠다”
문재인 후보		
1면	12/09/07	‘민주 본영’서도 문재인 1위
1면	12/09/17	민주 대선후보 문재인
1면	12/12/14	광주가 정권교체 중심에 서달라
안철수 후보		
1면	12/09/07	“새누리, 안철수 불출마 종용”
1면	12/09/12	“민주 대선후보 선출 후 안철수 출마입장 표명”
1면	12/09/17	안철수 5·18묘지 참배...19일 출마선언
1면	12/09/18	안철수 내일 출마선언...국정 비전 제시
1면	12/09/20	안철수 “단일화 논의 지금은 부적절”
1면	12/10/04	안철수에 쏠린 눈
1면	12/11/15	安측 “단일화 협상 당분간 중단”
1면	12/12/04	안철수 “文지지 제뚝 받아주실 것 믿어”
1면	12/12/06	감질난다, 안철수
이정희 후보		
1면	12/12/17	이정희 “정권교체 위해 대선후보 사퇴”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이정희		
1면	12/12/05	朴 “北과 조건 없는 대화” 文 “보복 없는 정치”
박근혜+문재인+안철수		
1면	12/09/28	朴 39.5% 安 32.2% 文 23.0%
박근혜 + 문재인		
1면	12/11/26	허탈한 단일화...대선 朴·文 대결로

1면	12/11/27	朴 대전서, 文 부산서 첫 유세
1면	12/12/03	“귀족 후보” “다운계약서” … 비방전 혼탁
1면	12/12/03	朴45.3% 文40.4% 접전속 13.4% 무응답
1면	12/12/10	혹한속 인파 대결 … 정치쇄신 주도권 싸움
1면	12/12/13	박근혜 46.3% 문재인 40.4%
1면	12/12/17	朴 “4대 질환 건보 적용” 文 “복지예산 39조 확보”
1면	12/12/17	막판 치단자 진흙탕 싸움
1면	12/12/18	초박빙 판세 ‘운명의 24시간’
1면	12/12/19	朴 “국민 행복시대 열겠다” 文 “투표로 새시대 열어달라”
문재인+ 안철수		
사설	12/09/20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만이 미래있다
1면	12/11/12	文-安 단일화 ‘룰 협상’ 개시
1면	12/10/23	文-安 단일화 압박 거세진다
1면	12/10/24	대전판도 ‘호남의 힘’
1면	12/10/31	文-安 단일화 급물살
1면	12/11/02	호남민심 잡아야 단일화 승리
1면	12/11/06	문재인-안철수— 오늘 단둘이 만난다
1면	12/11/07	文·安 후보 등록전 단일화 합의
1면	12/11/19	단일화 방식 협상 오늘 재개
1면	12/11/19	단일화 호남민심 安·文 초접전
1면	12/11/20	文·安 21일 단일화 TV토론
1면	12/11/21	文·安 단일화 방식 놓고 격돌
1면	12/11/22	단일화 룰, 文·安 담판으로 가나
1면	12/11/23	지지도·가상대결 모두 물어 단일후보 결정하자
1면	12/11/26	호남 安지지도 90%이상 文으로
사설	12/11/26	야권 후보 ‘단일화 정신’ 이어가려면
1면	12/12/07	“조건없이 文 지원” 안철수 드디어 등판
박근혜 + 안철수		
1면	12/09/10	박근혜 · 안철수 정면충돌 경쟁구도 양자대결 솔림

<표 24> 대전일보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박근혜 후보		
1면	12/08/21	“산업·민주화 넘어 국민대통합”
1면	12/09/14	“기업 대규모 유치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1면	12/09/25	“5·16·유신·인혁당 헌법가치 훼손”
1면	12/10/10	박근혜-이인제 대통합 연대?
1면	12/10/15	盧·金 대화록 · 정수장학회 대선 최대 쟁점 급부상
1면	12/10/22	“정수장학회 이사진 현명한 해답 내놔야”
1면	12/11/08	朴 “집권땐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1면	12/11/14	박근혜 과학벨트 발언 파장
1면	12/11/15	과학벨트, 국책사업 맞긴 맞나
1면	12/11/28	“과학벨트 부지매입 先국고지원”
문재인 후보		
1면	12/09/10	문재인 1위…누적득표율 과반 돌파
1면	12/09/17	“독선 청산 소통·화합 리더십 발휘”
1면	12/10/11	文 “과학벨트 전폭 지원”
안철수 후보		
1면	12/09/11	안철수-안희정 비밀리 회동 대선캠프 가동 조연 가능성
1면	12/09/12	“민주 경선 끝나면 출마 입장 밝힐것”
사설	12/09/12	대선 출마 선언 임계점에 이른 안원장
1면	12/09/13	안철수 25일 대선 출마선언?
1면	12/09/18	安, 내일 대권 출사표
사설	12/09/18	내일 대선후보 이름표 다는 안철수 원장
1면	12/09/20	“정치쇄신 시대적 숙제 풀겠다”
사설	12/09/20	대선 90일 전쟁 뛰어든 안철수 원장
사설	12/10/03	안철수 후보의 뜻뜻미지근한 대선 행보
1면	12/10/08	충청 표심잡기 세종 염두 주목
사설	12/10/08	안철수 후보 정책비전, 더 다듬어져야
1면	12/10/11	安 “농업혁신·사회 융합”
사설	12/10/24	안철수 후보, 국회의원 수 줄일 자신 있다
사설	12/11/27	퇴장한 ‘안철수’ 그늘 못 벗어나는 대선판
1면	12/12/04	“지지자 文 성원 제뜻 받아줄것”
사설	12/12/04	안철수 전 후보, 대선 조연으로 물러나나
사설	12/12/07	뜸 들이다 대선전 전위로 나서는 안철수
이정희 후보		
1면	12/12/17	이정희 후보 전격 사퇴
사설	12/12/17	이정희 전 후보의 참 나쁜 처신
박근혜+문재인		
1면	12/11/26	초박빙 판세 … 朴-文 대혈전 시작됐다
사설	12/11/26	朴·文 후보, 후회 없는 한판 승부 펼치길
1면	12/11/30	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文 충청권 공약 실현 주목
1면	12/12/03	전국 朴 45.3 - 文 40.4% 충청 朴 50.2 - 文 35.1%
1면	12/12/10	朴 “국정쇄신회의 설치” - 문 “대통합내각 구성”
1면	12/12/11	朴 “시장경제 투명성 바로 잡을 것” 文 “재벌 개혁·공정한 질서 확립”
1면	12/12/13	전국 朴 46.3% - 文 40.3% 충청 朴 50.9% - 文 33.2%
1면	12/12/14	미사일·국정원…선거 막판 변수 급부상

1면	12/12/17	朴 “여성 일할수있도록 실질지원 중요” 文 “저출산 고령사회법 새누리서 반대” 문재인+ 안철수
사설	12/09/17	대선行 티켓 손에 쥔 민주당 문재인 후보
1면	12/09/21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신경전
1면	12/10/31	文 “논의 더 늦출수 없어” - 安 “안하겠다는 것 아니다”
1면	12/11/01	文 “중도사퇴땐 보조금 환수 수용”
1면	12/11/05	야권 단일화 새국면 맞나
사설	12/11/05	단일화 벽에 간혀 몸 다는 문재인 후보
1면	12/11/06	文-安, 오늘 ‘단일화’ 회동
1면	12/11/07	“대선 후보 등록 전 단일화”
1면	12/11/08	文-安 ‘단일화’ 를 전쟁’ 신경전
1면	12/11/09	文-安 후보단일화 본격화
1면	12/11/12	文-安, 오늘 단일화 를 협의
1면	12/11/13	文-安 단일화 협상 본격화
1면	12/11/14	후보 적합도 - 본선 경쟁력 신경전
1면	12/11/15	安 “단일화 를 협상 당분간 중단”
사설	12/11/15	첫 과열음 낸 문·안 단일화 수 싸움
1면	12/11/16	文 “부담준 점 사과...협의하자” 安 “과정보다 결과에 연연 우려”
사설	12/11/16	단일화 과문으로 뒤죽박죽인 대선정국
1면	12/11/19	“오늘부터 단일화 방식 실무협상”
사설	12/11/19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문·안 ‘단일화 정치’
1면	12/11/20	文-安, 단일화 TV토론 한다
사설	12/11/20	국회의원 정수 문제로 옥신각신 할 때인가
1면	12/11/21	“언론플레이 불만” - “만행이야기 그만”
사설	12/11/21	단일화 방식, 기발한 묘안이 있겠나
1면	12/11/22	‘지지도-경쟁력’ 여론조사 진통
1면	12/11/23	文-安 후보 단일화 담판 무소독
1면	12/12/06	文 전폭지원 뜰들이는 安
1면	12/12/07	安 “文 전폭지원”
1면	12/12/14	文-安 대전 첫 합동유세 지지호소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1면	12/08/27	박근혜, 누구와 대결해도 지지도 압도적 1위
1면	12/09/17	‘朴-文-安’ 대선 3파전 압축
1면	12/10/02	과거사·단일화...뜨거운 설전
1면	12/10/03	朴-통합 文-공정 安-혁신
1면	12/10/04	朴-文-安 충청 민심잡기 외곽조직 세걸집 가속도
1면	12/10/12	3色 선대위 출범...빅3 경쟁 본격화
1면	12/10/17	“나와 관계없다”-“사실이면 책임”

1면	12/10/19	朴-창조 文-공정 安-혁신
1면	12/10/25	국감 끝...대선 빅3 “승부는 이제부터”
박근혜 + 문재인 + 이정희		
1면	12/12/05	“저축銀 압력 책임” - “안보강조 불구 구멍”

<표 25> 경인일보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박근혜 후보		
1면	12/08/21	새누리 대통령 후보 ‘박근혜’
사설	12/08/21	새누리 박근혜 후보 선출, 막으려 대선
1면	12/09/03	李대통령·朴후보 회동...치안·민생경제 등 논의
1면	12/09/14	“인혁당 유가족 동의하면 만나 뵈겠다”
사설	12/09/14	박근혜, 역사적 화해의 용단 내려야 한다
1면	12/09/19	朴 “여성지도자의 섬세한 리더십 필요”
1면	12/09/25	“5·16과 유신·인혁당은 헌법가치 훼손”
사설	12/09/25	‘박정희의 딸’ 아닌 ‘대선 후보’ 선택한 박근혜
1면	12/11/13	박근혜 “해수부 부산 설치” 지역항만업계·정계 ‘발끈’
1면	12/11/30	朴“亞게임 적극 지원하겠다”
1면	12/12/11	朴, 亞게임 성공 개최 지원
문재인 후보		
1면	12/08/27	문재인 2회 연속 과반 득표
1면	12/10/23	文“인천·경기, 경제수도로 육성”
안철수 후보		
사설	12/09/07	진흙탕 싸움으로 변진 안철수의 장외행보
사설	12/09/10	대선 D-100
1면	12/09/18	안철수 원장 대선출마 내일 기자회견서 밝혀
1면	12/09/20	안철수의 생각은...‘대선 출마’
사설	12/09/20	안철수 대선 출마선언, 막으려 대선정국
사설	12/09/27	단일화 사다리를 건어찬 안철수
1면	12/10/24	인천 찾은 안철수 대선후보 ‘지역 핵심어젠다’ 건네 받아
1면	12/12/04	안철수, 문재인 지지의사 재확인
사설	12/12/04	언제까지 안철수의 입만 바라볼 것인가
1면	12/12/06	안철수 ‘文 전폭 지원’ 가닥
박근혜 + 문재인		
1면	12/11/26	‘박정희의 딸’ VS ‘노무현의 남자’
1면	12/12/03	유세 첫 주말 朴 45.3% vs 文 40.4%
1면	12/12/10	‘굳히기vs뒤집기’ 朴-文 사활 건다
1면	12/12/13	박근혜 46.3% vs 문재인 40.3%
1면	12/12/14	朴-文 ‘마지막 주말’ 승부수 띄운다
1면	12/12/17	朴 “국정원女职工 인권침해”

		文 “수사중인데 왜 변호하나”
1면	12/12/18	인천상륙 나선 朴-文 “승기 잡았다”
1면	12/12/18	朴 “3~5%p 차로 승리” 文 “골든크로스 발생”
1면	12/12/19	대한민국 5년,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문재인 + 안철수		
1면	12/09/28	수도권 민심은 文·安
사설	12/10/26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논란의 명암
사설	12/10/31	조급한 문재인, 느긋한 안철수, 피곤한 국민들
1면	12/11/06	文-安, 오늘 단일화 단독회동
1면	12/11/07	文-安 “후보 등록전 단일화”
1면	12/11/15	安 “룰업의 중단” 단일화 급제동
1면	12/11/16	文쪽의 ‘사과’ 文에선 ‘거절’
사설	12/11/16	단일화 협상 파행을 지켜보는 민심
1면	12/11/19	文-安, 새정치공동선인 합의
1면	12/11/21	文-安, 단일화 ‘최대 승부처’
사설	12/11/23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감동적인 단일화
1면	12/12/07	安 “아무 조건없이 文 지원...분수령 될것”
사설	12/12/07	안철수의 가세로 요동치는 선거판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1면	12/09/21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3자 대결’ 수도권서 스타트
사설	12/09/21	안철수에 추궁당하는 박근혜와 문재인
1면	12/09/28	安 50.1>朴 42.6...文 47.0>朴 45.5 朴 38.5>安 32.2 > 文 23.0
1면	12/10/03	추석 민심 촉각 곤두세운 ‘朴·文·安’
사설	12/10/18	과거사와 모호함이 판치는 대선판
사설	12/11/07	文·安 단일화 합의와 朴의 ‘정치쇄신안’
박근혜 + 문재인 + 이정희		
1면	12/12/05	박근혜-문재인, 첫 TV토론 ‘날선 공방’
1면	12/12/11	朴 “부동산 문제, 참여정부때 불거져” 文 “새누리· 朴후보 때문에 민생 파탄”

<표 26> 강원일보 후보자에 대한 기사 주제

박근혜 후보		
1면	12/08/21	박근혜 “국민 대통합의 시대 열어 가겠다”
1면	12/08/23	박근혜, YS·이회호 여사 잇단 예방 이틀째 ‘국민 대통합’ 광폭 행보
1면	12/09/03	이 대통령 만난 박근혜 “100일간 범국민 특별안전화

		립 기간으로 정해야”
1면	12/09/14	“동계 경기시설·인프라 지원 최선”
1면	12/09/25	박근혜 “5·16-유신-인혁당 사건, 헌법가치 훼손”
1면	12/12/13	열악한 SOC로 ‘강원도 대선공약’ 이룰 수 있나
문재인 후보		
1면	12/08/27	문재인, 제주·울산 승리
1면	12/08/29	문재인, 민주 강원 경선도 1위…대세론 확인
1면	12/08/31	문재인, 충북 경선 1위…과죽의 4연승
1면	12/09/17	문재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겠다”
1면	12/11/02	“평화경제지대·남북경협으로 강원지역 경제 꼭 살리겠다”
안철수 후보		
1면	12/09/07	안철수 측 “새누리당, 대선 불출마 종용” 파문
1면	12/09/12	안철수, 민주 경선 후 출마 입장 표명
이정희 후보		
1면	12/12/17	이정희 대선후보 사퇴
박근혜 + 문재인		
사설	12/09/18	강원도, 소외·낙후의 껍질 벗고 진화 꿈꾸자
1면	12/10/27	10·26 33주기 … 朴·安 잇달린 참배정치
1면	12/11/26	박근혜 vs 문재인 ‘초박빙 승부’
1면	12/11/26	朴-文지지를, 安사퇴 후 ‘엎치락뒤치락’
1면	12/11/28	“실패 정권 핵심” vs “유신 독재 잔재”…첫날부터 난타전
1면	12/11/29	박근혜 59.8% VS 문재인 27.3%
1면	12/11/30	여야 강원표심 선점 경쟁 치열
1면	12/12/03	朴 “약속 지키고 민생문제 최우선 해결” 文 “현 정부 민생 실패 박 후보 공동책임”
1면	12/12/03	박근혜-문재인, 서울 경기 인천서 초접전
1면	12/12/08	주말 유세 총력전
1면	12/12/10	여야, 이번주 명운건 두 번째 ‘강원대전’
1면	12/12/11	朴 “참여정부 양극화 가장심각” 文 “민생 실패 박후보 책임없나”
1면	12/12/13	朴 46.3% vs 文 40.3%
1면	12/12/17	박근혜 “참여정부 때 대학 등록금 폭등” 문재인 “현 정부 반값등록금 요구 묵살”
1면	12/12/19	박 “중산층 시대 회복” 문 “시민의 정부 출범”
문재인 + 안철수		
1면	12/10/31	야권 단일화 진전 … 내달 중순 본궤도
1면	12/11/01	文 “즉시국민경선” 安 “열흘 뒤 여론조사”
1면	12/11/06	안철수-문재인 오늘 단일화 회동…대선 정국 요동

1면	12/11/07	文-安 후보 등록전 단일화 합의
1면	12/11/13	文-安 단일화 ‘룰 전쟁’ 기싸움 치열
1면	12/11/15	文-安 ‘단일화 룰’ 협상 잠정중단
1면	12/11/17	文-安 단일화 중단 사태 ‘봉합이나 장기화냐’기로
1면	12/11/19	문재인·안철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새정치 선언
1면	12/11/21	文-安 단일화 ‘공론조사 방식 여론조사 문구’ 놓고 신경전
1면	12/11/22	文 ‘적합도’ vs 安 ‘경쟁력’ ... 야권 단일화 공방 첨예
1면	12/12/07	안철수 “문재인 후보 지원 나선다...대선 후에도 협력”
박근혜 + 문재인 + 안철수		
1면	12/09/20	朴-文-安 ‘3자구도’ 막 올랐다
1면	12/09/22	민심 출렁 ... 추석이 대선 1차 관문
1면	12/09/24	朴·文·安, 추석 민심잡기 행보 박차
1면	12/09/28	3자대결 ‘朴’ 앞서고 양자대결 ‘文·安’우세
1면	12/09/29	朴-文-安 ‘차례상 민심’ 얻으려 국민 속으로
1면	12/10/08	대선 판도 요동친다
1면	12/10/12	朴·文·安 중앙 선대위에 ‘강원도는 없다’
1면	12/10/15	대선주자들 몽치표 챙기기 급급 강원 홀대 심각
1면	12/10/18	朴·文·安 강원 표심잡기 나섰다
1면	12/10/19	朴-安 ‘강원대첩’ 주도권 경쟁 본격화
사설	12/10/23	밀그림 없는 공약으로 민심 얻을 생각 말라
1면	12/10/29	강원·충청 ‘朴우세’ PK ‘文·安 약진’
1면	12/11/03	文·安 “3자토론” 朴 “단일화 포기하면 당장 참여”
1면	12/11/19	‘승패’ 강원 표가 가른다
사설	12/11/19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인식과 약속
1면	12/11/20	文·安 ‘야권 단일화’ vs 朴 ‘준비된 여성대통령’... 여야 맞붙
1면	12/11/23	文측 “적합도+ 가상대결” vs 安측 “지지도+ 양자대결”
박근혜 + 문재인 + 이정희		
1면	12/12/05	권력형 비리 척결·남북 관계 ‘날선’ 공방

<표 27> 부산일보 선거 관련 보도

사설	12/09/24	투표시간 연장 무산, 보완할 점은 없는가
사설	12/10/02	추석 민심, 정책 비전으로 승화시켜야
1면	12/10/05	오늘부터 국정감사...대선후보 검증 쟁점
사설	12/11/05	토론·인터뷰 안하면서 ‘소통’하자는 대선주자들

1면	12/11/20	10년 전 ‘같은 길’ 단일화 효과도 같을까?
사설	12/11/26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대선 왜야
1면	12/11/28	분위기 안 뜨는 이상한 대선
사설	12/12/04	첫 TV토론 정책대결로 이어져야
1면	12/12/05	“맥빠진 TV토론” 개선 여론
사설	12/12/05	형식에 발목잡힌 TV토론, 방법을 바꿔라
1면	12/12/10	18대 대선 운명의 숫자 70·10·40
1면	12/12/11	오늘부터 14일까지 선상투표
사설	12/12/11	구체적 대안없는 대선 TV토론
사설	12/12/12	재외국민 투표 열기, 국내서도 재현되길
사설	12/12/14	네거티브 공세에 표심 흔들리지 않는다
1면	12/12/17	투표율 70% 넘어설까? 네거티브 파장 어디로...
사설	12/12/18	내 가족의 삶과 국가의 장래, 한 표에 달렸다
1면	12/12/18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1면	12/12/19	대한민국 미래 바꿀 한 표 한 표
사설	12/12/19	18대 대선의 명(明)과 암(暗)

<표 28> 매일신문 선거 관련 보도

사설	12/09/10	대통령선거 D-100일, 아직도 안갯속 정국
1면	12/09/29	朴心·文心·安心...‘차레상’民心은 어디로?
사설	12/10/03	대선 후보, 정책 경쟁·검증에 성실해야
사설	12/10/05	국감, 대선 후보 흠집 내는 자리 아니다
사설	12/10/09	아무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 대선 주자들
사설	12/10/29	투표 시간 연장, 정략적 이해 떠나서 검토를
사설	12/11/08	정치 쇄신 강조해놓고 대선 막말 공방
사설	12/11/27	유권자 오도하는 대선 허위·과장 공약
사설	12/12/01	양자 TV토론으로 유권자 판단 도와야
사설	12/12/03	선거 홍보물 훼손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1면	12/12/05	해외서도...재외유권자 대선 사상 첫 투표
사설	12/12/11	‘경제성장’ 실종된 대선 TV토론회
사설	12/12/12	재외국민 높은 투표율, 국내로 이어져야
1면	12/12/14	선거 막판엔 또 ‘흑색선전’
사설	12/12/14	대선 막판 막말·흑색선전, 선거 문화 해친다
1면	12/12/17	나 하나만이라도...투표율 상승할까
1면	12/12/17	더 복잡해진 투표율 ‘셈법’
사설	12/12/17	정책 대결 펼친 양자 TV토론, 제도 개선도
1면	12/12/18	“투표하면 할인”
사설	12/12/18	적극 투표로 미래를 결정하라
1면	12/12/19	지지율 50% 넘기는 첫 대통령 나올까
1면	12/12/19	투표율 70% 넘을듯

사설	12/12/19	대선 선택의 날, 새 시대 향한 출발점 되길
----	----------	--------------------------

<표 29> 광주일보 선거 관련 보도

1면	12/09/19	호남후보 없는 대선 차분한 관망
1면	12/11/23	촉박한 단일화...에타는 호남민심
사설	12/11/26	야권 후보 '단일화 정신' 이어가려면
1면	12/11/29	박근혜 현수막 수난 ... "성숙한 시민의식을"
사설	12/11/30	선거 현수막에 칼질, 시민의식 이정도인가
1면	12/12/11	민생파탄 책임 난타전
1면	12/12/12	재외 대선투표 종료...투표율 71.2%
1면	12/12/14	姜시장·박지사 투표참여 독려 담화문
1면	12/12/18	내일 투표...밤 11~12시께 당락 윤곽
1면	12/12/19	보수-진보 갈림길...선택의 날 밝았다
사설	12/12/19	투표 참여가 국가의 명운 좌우한다

<표 30> 대전일보 선거 관련 보도

1면	12/08/31	염홍철 "대선 특정후보 지지"
1면	12/09/10	박근혜VS?... 안갯속 대장정
1면	12/09/24	빅3 대선구도 40대 표심 중대변수
사설	12/10/02	대선주자들, 이젠 정책 品質로 경쟁할 때
1면	12/10/05	이미지 대선전 정책검증 실종
1면	12/10/22	과거에만 매달리는 답답한 대선
사설	12/10/23	미답지 않은 대선주자들 '새정치' 다짐
사설	12/10/29	대선후보들 정책메뉴, 식상해진다
1면	12/10/30	"지방자치 실현 참인물 기대"
1면	12/11/06	충청권 대선 비중 미약한 현실 차문해봐야
사설	12/11/13	대선후보 TV토론 사라진 희한한 선거관
1면	12/11/20	"정책검증도 못하고 투표장 갈 판"
1면	12/11/23	충청 주요현안 대선에 발목
사설	12/11/29	대선후보 TV양자토론 '조합' 더 만들면 돼
사설	12/12/03	예기치 않은 대선후보 수행 차량 사고
사설	12/12/06	주객이 뒤바뀐 듯한 대선 TV토론
사설	12/12/10	정치쇄신 공약 봇물, 한 가지라도 실천하길
1면	12/12/12	맥빠진 TV토론 "시간이 아깝다"
1면	12/12/12	내일부터 이틀간 부재자 투표
1면	12/12/18	"청렴·공약 실현중요 소중한 한표 꼭 행사"
사설	12/12/18	진흙탕 싸움으로 막 내리는 대선판
1면	12/12/19	나 하나만이라도 꼭... 유권자 힘 미래 열어요
사설	12/12/19	400만 충청 유권자 선택에 달린 지역발전

<표 31> 경인일보 선거 관련 보도

1면	12/09/19	인천에도 본격 ‘대선 바람’ 분다
1면	12/09/21	대선후보 모셔라
사설	12/10/03	검증과 네거티브 철저히 구분해야
사설	12/11/02	위기 앞에서 정치공학에 매몰된 대선후보들
사설	12/11/05	‘여성대통령 논란’과 우리의 정치수준
사설	12/11/19	D-30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대선정국
사설	12/11/26	이제 두눈 크게 뜨고 후보 정책 검증해야
사설	12/12/03	쫓추는 네거티브, 정책대결 실종하나
사설	12/12/10	보수·진보 대충돌, 그 이후가 걱정이다
1면	12/12/12	한·중 카페리호서 ‘사상 첫 부재자 투표’
사설	12/12/12	대선후보들, 한국경제 현주소 제대로 알고있나
사설	12/12/14	막판 타락 조짐 보이는 대통령선거
1면	12/12/17	투표만이 ‘인천의 힘’ 키운다
사설	12/12/17	네거티브로 당락이 좌우돼선 안된다
사설	12/12/18	대선변수로 떠오른 경찰의 ‘땃글’ 수사발표
1면	12/12/19	밤 11~12시 사이 당선자 윤곽
사설	12/12/19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표 32> 강원일보 선거 관련 보도

1면	12/09/10	캐스팅보트 활용해 ‘강원도 미래 바꾸자’
사설	12/09/11	대선, ‘강원도 3%씩’ 뛰어넘는 계기 만들자
1면	12/09/20	대선 D-90…선관위 종합상황실 설치 비상근무체제 돌입
사설	12/09/21	대선 회오리…도 정치권, ‘주민 편’에 줄서라
사설	12/09/29	대선주자,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미래 말해야
1면	12/10/05	사라진 부동산 대선 셈법 복잡
사설	12/10/19	대선 주자들의 강원도에 대한 인식과 약속
1면	12/10/22	소설가 이외수 “대선주자들 강원도 챙겨라”
1면	12/10/25	대선후보 10대 공약 공개
사설	12/10/29	도 현안 해결, 대선후보에 당당히 요구하자
1면	12/10/30	강원도 뭇 챙기기 ‘캐스팅보트’만으로 안 된다
사설	12/11/02	강원도 뭇은 ‘유권자 3%’가 뚝뚝 뭉칠 때 나와
1면	12/11/06	강원도 표심이 대권 가른다
1면	12/11/14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공약화하라”
사설	12/11/17	‘동계스포츠지구’ 정부 매입, 알펜시아 회생길
1면	12/11/21	부재자 신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사설	12/11/27	강원도 '3% 표심' 뚝뚝 뭉쳐 미래로 달리자
1면	12/12/01	투표율 68%보다 낮으면 - 朴 높으면 - 文 유리
1면	12/12/04	대선 '경기회복·경제 활성화' 최대 이슈
1면	12/12/06	사상 첫 재외국민 대선 투표
사설	12/12/10	'3% 표심' 뭉쳐야 알펜시아 동서 고속철 해결
1면	12/12/12	18대 대선 도내 유권자수 123만 5,187명
사설	12/12/14	'강원도 길' 하나 뚫는 사업 결정에만 20년 걸려
사설	12/12/15	절정에 이른 대선, 국민 눈으로 혼탁 경계하자
사설	12/12/17	네거티브로 모든 쟁점 빨아들이는 대선되나
사설	12/12/18	'시대 정신'을 구현할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설	12/12/19	표심 결집해 역동적인 '강원도의 힘' 보여주자

